



SINCE 1949



국회보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2023. 09
VOL. 682

100일의 정기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알찬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 소식지

국회보

since 1949

2023. September
Vol. 682

간행물발간등록번호

31-9710176-000680-06 ISSN1975-7581

발행일

2023년 9월 1일

발행인

이광재 국회의사무총장

국회홍보출판위원회

박장호 위원장(사무차장)
박태형 위원(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위원(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위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진선희 위원(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위원(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수옥 위원(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지은 위원(문화소통기획관)
성소미 위원(공보기획관)
김형진 간사(공보담당관)

국회보편집실사무위원회

한주연(보좌관), 윤희진(신임비서관), 이구형(서기관)

편집진

글 김현아(취재보도사무관), 고영선, 박민선, 윤성혜
사진 김지범(촬영사무관), 임진완, 김진원, 유윤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6788-2058 book@assembly.go.kr
디자인·인쇄 (주)이팝 02)514-7567

※ 이 책의 우측 상단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04

04 지금 국회에서는

- 국회, 2023년 을지연습 실시
- 김진표 국회의장,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 김영주 국회부의장,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첫 제안한 이다정 간호사 등에 공로장 수여
- 정우택 국회부의장,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 국회본회의, '도시침수방지법' 등 안건 41건 처리

11 특집 - 미리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 민생을 최우선하는 생산적인 국회 _윤재옥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민생 법안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 극복에 총력 기울일 것 _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 기반 마련할 것 _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
- 수출역량 및 글로벌 공급망 강화, 재정준칙 법제화 과제 _윤영석 기획재정부위원회 위원장
- 백년대계 교육, 당리당락은 잠시 내려놓자 _김철민 교육위원회 위원장
- 여야 일심(一心)으로, '과학기술 강국' 이뤄낼 것
_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여야, 국익 결린 외교·안보에 힘 합쳐야 _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국회 국방위, 국가와 군에 도움이 되어야 _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장
- 재난 대응체계 점검, 보상 현실화 등 국민과 함께하는 행안위 될 것
_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투자 확대와 제도적 기반 정비
_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농어가 안전망 구축과 식량안보 강화로 미래를 준비할 것
_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국회의 역할 다 할 것
_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 활동적인 국회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미래를 목표할 것 _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약자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 노동정책,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환경정책 펼 것
_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 국민 주거 안정, 안전한 교통서비스 확대에 힘쓸 것 _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여성가족위원회 될 것 _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CONTENTS



44



48



50



52

- | | |
|--|---|
| <p>44 길에서 길을 찾다 _류성길 의원
대구의 신성장 미래엔진, 대구 동구</p> <p>48 의원의 좌우명 _어기구 의원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가 되는 것</p> <p>50 칭찬합시다 _김회재 의원
지성호 의원이 김회재 의원을 칭찬합니다</p> <p>52 나의 인생 나의 정치 _전주혜 의원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원칙주의자</p> <p>54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유령아동 방지와 보호정책,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p> <p>60 함께하는 국회
공항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p> <p>62 법률, 시대를 읽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강화 _정성희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p> <p>64 주재관 리포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023년 러시아 연방의회 _손명동 국회 러시아 주재관</p> <p>67 국회의 풀꽃과 나무 이야기
꽃범의 꼬리</p> <p>68 이달의 청원</p> <p>70 위원회는 지금
국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제빵 공장 사고 현장 시찰 등</p> | <p>74 국회 뉴스</p> <p>78 법 시행 그 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p> <p>80 새 법률 소개
국회 본회의, 법률안 110건 의결</p> <p>84 만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p> <p>86 4차산업혁명시대 살아가기
데이터로 묻고, 데이터로 답한다 _김동철 교수</p> <p>88 국회 사람들
"국회를 국민에게, 국민을 국회로"
_김명진 국회방송(NATV) 국장</p> <p>90 이달의 서평
각자도사 사회 _최은경 교수</p> <p>92 고전에서 읽는 지혜
정약용의 '맹자요의(孟子要義)' _박석무 석좌교수</p> <p>94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대둔산 _유인근 여행칼럼니스트</p> <p>98 국회 미술관
검고 푸른 저 산, 지리산 _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장</p> <p>101 찰칵, 국민이 담은 국회</p> <p>102 생활 속 우리말갈
섬세한 어감이 우리말 품격을 높인다 _김풍기 교수</p> <p>104 정치 관련 주요 일지</p> |
|--|---|

국회, 2023년 을지연습 실시



8월 22일 국회에서 경찰특공대가 2023년 국회 을지연습 테러 대응 훈련을 하고 있다.

2023년 을지연습이 8월 21일 국회에서 실시됐다.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인 을지연습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됐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8월 21일 국회종합상황실에서 2023년 국회 을지연습 상황보고를 주관했다. 이날 상황보고에는 국회 각 기관장과 국회사무처 간부 직원,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비상계획관이 현재 군사상황과 정부상황, 전시 국회가 수행하는 주요업무, 이번 을지훈련 기간 중 실시되는 주요훈련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상황보고를 받은 후 “작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지속되면서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듯이, 우리도 전쟁

의 위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전 직원은 이번 을지연습에 적극 참여하여 개인 및 부서별 전시 임무를 확인하고 훈련을 통해 숙달함으로써 국회 비상대비태세를 한층 격상시켜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찰드론 공격, 회의장 난입 등 테러상황 상정한 시범식 훈련 진행

8월 22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테러 대응 종합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열린 야외 행동화훈련이다.

이날 훈련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소속기관장, 국회사무처 간부 직원,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고 경찰특공대,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소방서,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부대, 국회기동대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8월 22일 테러 대응 종합훈련을 마친 뒤 재난 및 대테러 진압장비를 둘러보고 있다.

등 국회에서 테러 발생 시 진압작전을 지원하는 기관의 요원들이 함께했다.

훈련은 국회 인근에 불상의 정찰드론이 출현한 것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상황, 테러 용의자가 회의장에 난입하여 인질사태를 벌이는 상황에 대비한 진압 및 인질구출작전, 국회 건물에 대한 자폭드론 공격 시 대응 등을 상정해 실시했다. 참가 대원들은 상황별로 상황조치를 하고 참관자들에게 설명하는 시범식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훈련 종료 후 경찰특공대를 비롯해 훈련에 참가한 대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아파트가 붕괴되어 무고한 민간인들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을 교훈 삼아 우리도 만일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전 직원 지하대피소로 이동해 생활안전 교육 실시

8월 23일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정부 을지연습과 연계한 민방위 훈련을 실시했다.

공습경보가 울리자 김진표 국회의장, 이광재 사무총장을 포함한 국회 전 직원은 사전에 지정된 지하대피소로 이동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훈련종료 후 “국회가 드론테러, 사이버테러 등 다양한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과 실질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국회 전 직원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이번 민방위 훈련에서 생활안전교육 일환으로 환자이송법 교육과 실습을 실시했다. 지난 5월 국회 민방위훈련에서는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박동기(AED) 교육과 실습을 실시한 바 있다. 📍

김진표 국회의장, 김대중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통합·협력의 정치 위해 온 힘 다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8월 18일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이 8월 18일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대통령님께 배운 그대로 간절한 마음으로 통합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대통령께서는 외환위기라는 국난의 소

용돌이 한복판에서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소수·연립여당이라는 정치 현실에서도 국난을 극복하는 열쇠는 흩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데 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 노심초사하셨고 그런 진심이 전해져 온 국민이 금 모으기에 나서 외환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했다”고 회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하고 있다.

김진표 의장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을 '대한민국 현대사의 황금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5년의 임기동안 보복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정치연합의 대의를 지켜내기 위해 노력,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실천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세계 보편의 민주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김대중 시대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유능했다”며 한국형 복지제도, 햇볕정책, ICT 혁명 등 선진국으로 가는 새 길을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보험체계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한국형 복지제도의 뼈대를 튼튼히 세웠고 이를 통해 그간 양적인 성장에 급급했던 대한민국이 비로소 국민의 삶 전반을 두루 살피는 능력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햇볕정책’이라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세계인에게 ‘평화의 새길’을 설득하고 동의를 얻어냈고, 세계 열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마지막으로 “김대중 시대가 끝나고 2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우리 민주주의는 전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며 “저를 정치의 길로 이끌어 주신 대통령님께 배운 그대로 통합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국민을 믿고, 민주주의를 확신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김대중식 정치를 하겠다”면서 추도사를 마쳤다.

한편 이날 추도식에는 김진표 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 정부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김영주 국회부의장,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 첫 제안한 이다정 간호사 등에 공로장 수여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8월 16일 국회에서 '사회적부모'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에게 공로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8월 16일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팀 '사회적부모'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에게 국회부의장 공로장을 수여했다.

수상자들은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렸고, 특히 6월 말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상을 받게 됐다.

김영주 부의장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부모’ 활동 덕분에”이라며 수상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국회도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상자를 대표해서 이다정 간호사는 “출생이 환영받지 못하는 아동의 생명과 권리를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지켜주길 희망한다”며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프로젝트팀 '사회적부모'는 공무원, 변호사, 간호사가 모여서 보육원 퇴소 아동을 돕는 활동을 하다가 B형 간염 예방접종 기록과 출생신고 아동을 대조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감사원 감사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한편, 김영주 부의장은 지난 7월 24일 미등록아동 보호를 위해 '유령아동 방지와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8월 18일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보호·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정우택 국회부의장,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8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경찰청, 중앙대학교와 함께 8월 17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장항배 중앙대 교수와 박성규 경찰청 경제안보수사TF 계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좌장을 맡은 안성진 성균관대 교수가 토론을 이끌었다.

정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각국이 기술 패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 유출과 탈취 등의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정 부의장은 “2022년까지 국가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사례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도 문제이며 추정 피해 규모는 26조 원에 임박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경찰에서 송

치한 해외 기술유출사건은 29건으로 이 중 중국 17건(59%), 대만 4건(14%) 순으로 주력산업이 겹치는 중국으로의 유출이 절반 이상 차지한다. 그러나 산업정보 유출에 대한 무죄 선고율이 높고, 징역형 중 많은 수가 집행유예(75.3%)를 선고받기 때문에 기술유출 범행에 대한 심각성이 다른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 부의장은 “산업기술 유출 근절을 위해 국가와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며, 유출 입증조건 완화, 처벌 강화와 동시에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조은희 의원, 윤주경 의원, 김승수 의원과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참석했다. 📍

국회본회의, ‘도시침수방지법’ 등 안건 41건 처리



8월 24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는 8월 24일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9건을 포함한 총 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여야 모두 편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더욱 악화시킬까봐 걱정이 크다”면서 “국회의장으로서는 국민 입장에 서서 회기를 줄이거나 늘리는 것보다 노란봉투법·방송관계법과 같이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보다 충분한 협의와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어 국회의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수해 방지 및 복구 법안은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앞으로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 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보다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종합적인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제정안, 오토바이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를 정부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



특집

미리보는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9월 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 위원회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위원회 현안 등 정기국회 준비 상황을 들어보았습니다.

<편집자주>



민생을 최우선하는 생산적인 국회
윤재옥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생 법안 신속하게 처리해 국난 극복에 총력 기울일 것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국민 피부에 외닿는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 기반 마련할 것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

수출역량 및 글로벌 공급망 강화, 재정준칙 법제화 과제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백년대계 교육, 당리당락은 잠시 내려놓자
김철민 교육위원회 위원장

여야 일심(一心)으로, '과학기술 강국' 이뤄낼 것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여야, 국익 걸린 외교-안보에 힘 합쳐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국회 국방위, 국가와 군에 도움이 되어야!
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장

재난 대응체계 점검, 보상 현실화 등 국민과 함께하는 행안위 될 것
김교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투자 확대와 제도적 기반 정비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농어가 안전망 구축과 식량안보 강화로 미래를 준비할 것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국회의 역할 다할 것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활동적인 국회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미래를 목표할 것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약자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 노동정책,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환경정책 펼 것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국민 주거 안정, 안전한 교통서비스 확대에 힘쓸 것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여성가족위원회 될 것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민생을 최우선하는 생산적인 국회

2020년 5월 30일 시작된 제21대국회가 어느새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등을 소관으로 하여 국정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원내 대표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운영위원회가 대화와 타협,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증시하는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물가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호우와 폭염, 태풍 등의 재해는 취약한 서민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주력산업의 불황, 인구구조 문제 등으로 국가경쟁력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면과제의 해결을 위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산적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며 각종 국가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국회

이번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법안 심사,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쉼 없이 이어집니다. 국회운영위원장이자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여야가 협력하여 힘을 모으겠습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매월 3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실제로 지키는 상임위원회가



윤재옥 위원장
국회운영위원회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말뿐인 정쟁이 아니라 실제로 민생을 살피는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제21대국회의 마지막 예산안 심사 역시 여야의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예산안의 처리시한을 12월 2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생을 챙기는 예산,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심사하되 헌법상 기한도 준수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여야 간의 대승적인 협력이 절실합니다.

또한,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여주기식 감사가 아닌 정책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예년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고도 상임위원회 단계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장기간 지연되어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정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년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회가 국정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했는데, 국정감사법의 개정 취지가 준수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입법의 품질을 높여야

1948년 제헌국회 이후 우리 국회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이 높아졌고, 국민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의원입법이 활성화되었으며 의원발의 법률안은 제15대국회(1996~2000)에 800여 건에서 제20대국회(2016~2020)에 2만 1천600여 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입법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정부제출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기 전 규제영향분석을 거치는 반면, 의원발의 법률안은 규제검토 절차가 없어 규제입법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안에 규정된 규제의 신설·강화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영향분석이 도입될 경우 입법과정에서 규제입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의원입법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제21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여야가 유공무사(有公無私)의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한다면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국민민복에 기여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민생 법안 신속하게 처리해 국난 극복에 총력 기울일 것

현재 우리나라는 장기 경기침체,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갖가지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의 심각한 타격으로 서민들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 2021년부터 기업의 회생 신청보다 파산이 더욱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으며,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도산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도산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반면, 지방은 도산 전문 법원이 없어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방에도 회생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님들과 대법원 및 관계부처가 조속한 심사를 한 결과 이례적으로 3개월여 만에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3월 부산과 수원에 회생전문법원이 개원했습니다. 이처럼 여야 의원님들과 관계기관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제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거의 매월 법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님들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 보다 철저한 법안 심사 준비를 통해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제사법위원회 본연의 직무인 법률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 등 법안심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년여간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김도읍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크고 작은 성과들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간 노력해주신 법제사법위원님들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두 번째 정기 국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제사법위원회 본연의 직무인 충실한 법안심사는 물론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약·흉악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적 대책 마련

최근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현역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명 ‘묻지마 범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대와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최근 마약청 설립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고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개인을 병들게 함은 물론이고 2차적 3차적 추가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피해가 큰 만큼 이번 정기 국회에서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한 입법적, 정책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한 일련의 ‘무차별 흉악범죄’로 인해 국민이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테러 수준의 흉악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질서를 깨뜨리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흉악범죄에 대한

입법적, 정책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를 정부와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적 범죄 예고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흥기를 소지하는 ‘공공장소 흥기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신속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시급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지난 6년간 사법부의 정치화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우리법연구회 출신의 판사들이 법원 주요 요직을 차지해 정치 편향적인 판결로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법 부장판사 승진 제도가 폐지되고, 법원장 후보추천제 도입 등으로 일선 법관들의 업무 의욕이 크게 저하되어 재판 지연이 만연해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정기 국회에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사법부의 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등을 대상으로 민생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 기반 마련할 것

지난 1년 정무위원회는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IMF 이후 최대 위기라 불리는 경제 상황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여건을 조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에는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올 연말로 다가갈수록 미국이 경제 침체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인 부동산 부문의 디폴트 위험으로 중국 내수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그 여파가 우리나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내의 경우, 가계대출과 자영업자 부채가 1천조 원을 돌파하는 등 민간 부문 부채가 4천800조 원을 넘으면서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와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기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한계기업들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기에 금융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민생 안정에 최우선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 낼 것

제21대국회 마지막까지 정무위가 충분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안심사소위를 활성화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백혜련 위원장
정무위원회



지난 5월 정무위를 거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적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를 제정해 202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며 총 19개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 들어갔지만, 아직 가상자산업 전반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상장 등 가상자산업권 전체를 통괄하는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BDC 도입법안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해 유망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공모를 통한 자금 모집과 개인의 투자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도 다양화할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와 운용상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기에 리스크 부분을 점검해서 논의해야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이 선제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법원행정처가 재산권과 평등권, 사적자치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예금금리·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은행법’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은행 금리결정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취약차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개인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과 과도한 채권 추심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채무자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기범죄와 관련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법’이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이들 법안이 주요 입법과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물 경제 지원과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

정무위가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은 국정과 경제를 아우르는 정부 업무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정무위의 주된 역할은 금융 정책을 통해 실물 경제를 지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혁신적 경제 성장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 및 촉진하는 것입니다. 즉 지원과 규제를 함께 해야 하는 상임위입니다. 국정 전반을 아우르고 소관기관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임위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가상자산이나 빅테크 등 전례 없는 산업영역과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출현하는 가운데 혁신과 안정성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기술의 발달과 양극화의 심화로 발생하는 금융사각지대와 금융소외계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 정무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반기 정무위원회가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입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

수출역량 및 글로벌 공급망 강화, 재정준칙 법제화 과제

제21대국회는 코로나19 대유행과 전대 미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는 동시에 미·중 무역 갈등, 반도체 슈퍼 사이클 하락 국면, 최근 중국발 부동산 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실물·민생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역수지 누적적자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유가 시기의 무역 적자는 한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글로벌 제조업 수출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반복적이고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위기로까지 볼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수출주도 국가에서 기업·수출경쟁력 제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특히, 국가 성장 동력은 최첨단 기술 확보에 달려 있고 국가전략기술에 기업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가 다뤄야 할 과제로는 크게 국가 수출역량 및 글로벌 공급망 강화 그리고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 등이 있습니다.

먼저 최근 방산 수출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건설 등 대규모 공적 수출 보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외거래 관련 대출·보증·보험을 제공하는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의 지원 여력 확충이 시급하며,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불안정한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 대한 3국 정상의 공통된 문제 인식이 있었고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



윤영석 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



니다. 공급망 문제는 단순히 기업 차원이나 하나의 정부 부처 차원에서 대응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범정부적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기재위에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법' 제정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처리해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정준칙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한편, 660조 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가 불과 5년 말 1천100조 원에 육박했고 36% 수준이던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돌파해 국민 1인당 나랏빚이 2천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결국 조세부담과 미래 세대의 부담증가로 이어져 성장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GDP 대비 재정적자 3% 이하로 매우 간결하고 이를 국가재정법에 규율하여 구속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제사회(OECD·IMF)나 국제신용평가사에서는 재정준칙이 한국의 국가 채무 안정화 및 신용등급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건전재정기조로 취약 계층, 복지 예산의 축소를 우려하고 있으나 2023년 예산을 살펴보면, 전년(추경기준) 대비 -6.0% 감소한 총지출과 23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작업을 했음에도 사회복지예산은 5.6% 증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노인 등 핵심 취약계층에 대한 핵심복지지출 예산은 전년 대비 11.6%나 증가시켜 건전재정과 따뜻한 복지가 양립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구나 올해의 경우 긴축 재정상황에서도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6%)로 올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대폭 올리고 관련 복지예산만 2조 원을 증액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어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건전성 강화가 취약 계층에 대한 급격한 지원 약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이 원활히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비리, 면밀히 살필 것

한편,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최근 국무조정실에서는 1조 1천억 원 규모 사업에서 1천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수가 매년 증가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 등 지원규모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보조금의 부정 사용, 비리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민간단체가 영세하여 단순한 회계상 실수가 있는 경우도 있어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법 개정안'을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일부 단체의 비리로 대다수 순수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민생현안은 물론 국가경제 운용방향이나 거시 자원배분과 같은 각자의 소신과 철학이 정책으로 가장 잘 드러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님들의 견해 차이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하는 우국충정은 여야 모두 한 마음입니다. 이번 마지막 정기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최선의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백년대계 교육, 당리당락은 잠시 내려놓자

이 글을 쓰는 시점 기준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8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이 있거나 취학 자녀가 있는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수험생 뒷바라지에서 벗어난 가정에도 수능은 늘 화제가 됩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킬러문항 출제 배제를 언급하자 며칠 동안 온 나라가 들쭉였던 것도 ‘온 국민이 교육 전문가’라는 대한민국에서 교육문제가 얼마나 큰 관심이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공교육을 넘어서는 분야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였습니다. 사례로 제시한 것도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공교육 외 비문학 국어 문제와 과목 융합형 문제’라고 꼭 집어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제기해 교육계를 발각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후 전개는 다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 특유의 “좋아, 빠르게 가”였습니다. 임명 6개월 된 대입 담당 국장의 대기발령,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사 방침 발표와 원장 사임,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불과 나흘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벌어진 이 난맥상 앞에서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분야에서 현 정부가 보여준 우왕좌왕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만 5세 입학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부가 2025년 시행으로 뜻을 박고 속도를 내면서 정작 꼭 필요한 관련 종사자, 단체들과의 소통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철민 위원장
교육위원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인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많이 배운다고 말했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백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할 교육을 단 5년 임기에 검찰수사하듯이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불행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이 과연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인지 꼼꼼하게 들여다 보게 될 것입니다.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일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다른 말로 ‘교권’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는 발빠르게 현장 교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수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열었습니다. 현장의 요구를 담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개정 법안도 8월 17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31건이나 올라왔습니다.

법안 숫자가 많고 쟁점 조항들이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을 마련하자는 것에 여야가 동의하고 있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8월 17일 오전에는 여야 정당과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모여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4자 모두가 소모적인 논쟁은 지양하고 입법과제를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부에서는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꼽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사와 학생이 모두 존중받고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그 첫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장으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제고 해법 논의

교육분야의 오랜 현안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모든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권마다 온도차가 가장 심한 것이 또한 이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벌어진 사건 사고에 대해 전 정부 탓을 해 왔습니다. 또한 전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정책이며, 학력미달 비율이 증가했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하락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은 정책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하고,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진단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야당에서는 광범위한 사회 교육 유발, 강남 학생들과 그 외 지역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교육기회 불평등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어느 한쪽의 주장이 완전히 맞는 경우는 드문 법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일리가 있고, 빈틈도 있기 마련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하되 발전적인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줄 것을 기대합니다. 🍵

여야 일심(一心)으로, ‘과학기술 강국’ 이뤄낼 것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총선을 앞둔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는 제21대국회의 공과(功過)를 돌아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치열한 100일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를 맞아,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국정과제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협조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대한민국이 각종 과학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딩(Global leading)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을 최일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미래의 쌀, ‘우주·항공’ 분야에 국가 전력 쏟아야

과학기술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세계는 이미 몇년 전부터 ‘우주’와 ‘항공’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산업은 반도체 산업처럼 앞으로 우리를 먹여 살릴 ‘미래의 쌀’입니다. 매년 3~8%씩 성장하는 세계 우주항공 시장은 2030년 1조 3천418억 달러(한화 1천715조 원) 규모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장을 점하기 위해 벌써부터 세계는 무한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선진국들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Old Space)에서 민간주도의 뉴스페이스(New Space)로 빠르게 전환하고, 저궤도 위성통신에 기반한 6G, 7G 기술을 개발하며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고, 민간용 발사체 인프라 확보에도 투자하며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택시 등 미래형 항공교통인 AAM(Advanced Air Mobility) 기체 개



장제원 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도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외 선진국이 자체적으로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자국의 산업 생태계에 막대하게 투자한 반면, 우리나라는 예산의 집중 투입은커녕 전담기관조차 아직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을 만들고 우주항공 전반에 대한 투자에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초당적 협력이 긴요한 때입니다. ‘우주항공청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위원장으로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방송통신분야 공정성 및 국민 신뢰 회복 시급

방송통신분야의 최일선 과제는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3’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28%에 불과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조사 대상 46개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41위, 여전히 최하위 수준입니다. 앞선 조사는 우리 국민이 뉴스를 회피하는 가장 큰 이유를 “뉴스를 신뢰할 수 없거나 편향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가짜뉴스를 타파하고 기울어진 언론 환경을 복원하는 것을 ‘방송통신분야’의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우선 공영방송의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공영방송이 가짜뉴스를 생성·유포하는 현장을 목도하며, ‘국민은 더 이상 공영방송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맞았습니다.

공영방송에 켜진 홍등(紅燈)은 공영방송 구성원 자체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입맛에 맞는 이사회를 선출한 것으로 모자라, 정권 교체 이후 야당은 단독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방송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는 왜 우리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공영방송의 공적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영방송의 위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 징수법 통과도 시급합니다. 지난 3월 시행된 국민참여토론결과에 따르면, 참여 국민의 96.5%가 수신료 분리징수에 찬성의견을 밝혔습니다. TV 수신료 제도 관련해서는 △제도 자체의 폐지(50%↑) △분리징수 시행(31.5%) △공영방송 역할·가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 등 다수 비판적 여론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황급히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도입하였으나, TV 수상기와 유료방송 가입 단말기 분리징수 법안 통과까지 마무리되어야 완전한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국회가 배척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미래 국가 경쟁력은 과학기술이 주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글로벌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할 일기일회(一期一會)에 놓여있습니다. 로켓발모지에서 누리호 발사까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부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 AI 기술은 전세계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전력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대전환의 시기에 국회가 절실한 마음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정쟁(政爭)과 이기(利己)보다는 오직 국가와 미래를 위해 여야가 일심(一心)이 되길 소망합니다. 🌻

여야, 국익 걸린 외교·안보에 힘 합쳐야

국제정세의 흐름을 읽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국제사회 동향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안개가 자욱한 형국입니다. 미국 국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중국을 방문해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는가 싶더니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다시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대만과 관련한 갈등도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장기화될 것이라고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앙숙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관계에 훈풍이 불고, 최근 해외자금 동결 해제와 맞물려 이란 핵협상 진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제정세 변화와 함께 중동 지역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신냉전 기류와 맞물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정세의 불안 요인을 해결하는 데 그 역할이 예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면서 힘을 보태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주와 자강이 절실합니다. 또, 굳건한 신뢰에 기반한 동맹의 가치가 더없이 중요합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확고히 다져야 합니다. 막연한 낙관과 안이한 대비가 큰 화를 부를 수 있는 만큼 자강과 동시에 동맹을 통해 힘을 비축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명실공히 세계가 부러워하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동맹이고,



김태호 위원장
외교통일위원회



올해가 바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방문했고, 외통위원장으로서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미국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올해 미국 국빈방문의 최대 성과는 양자 차원에서 최초로 핵 확장 억제를 문서로 확약하고 핵협의 그룹(NCG)을 창설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점입니다. 자금의 대흔돈의 국제정세하에서 국익을 수호할 최소한의 안전판부터 공고하게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는 한미 양국 정부의 동맹 강화 방침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핵 확장 억제 등 한미동맹 실효적 강화방안 폭넓게 논의돼야

9월이면 제21대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수많은 현안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야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한미동맹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 대치의 국회 상황에서 상당히 의미 깊은 일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최근 국제정세의 흐름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공통의 인식하에 한미동맹의 실효적 강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핵 확장 억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창설된 ‘핵협의 그룹’을 잘 발전시켜 나갈 방안과 관련해서 여야가 건설적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간다는 원칙과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제반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잘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힘에 바탕한 대북정책 촘촘하게 설계해야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난 5년의 대북정책을 냉철하게 평가하면서 힘에 바탕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보완할 점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5년간 남북관계를 이유로 사실상 외면하다시피 했던 ‘북한 인권’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의견 개진과 조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8·15 경축사를 통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계속 추진할 방침을 밝힌 만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복안에 대해서도 여야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으면 합니다.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이 허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진국 국회들은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우드로윌슨센터와 동아시아재단이 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미국 조야의 많은 전문가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여야를 떠나서 각별한 애국심을 보여주면서 자국의 국익에 관해서는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데 깊은 인상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국회도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더라도 최소한 침해한 국익이 걸린 외교·안보에서만은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21대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국회 국방위, 국가와 군에 도움이 되어야!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국회는 어느덧 제21대 마지막 정기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할 많은 현안과제가 있지만 ‘국방·안보는 우리의 생사와 직결’된다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력 강화가 비단 신무기 도입과 전투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근무·복지여건 개선, 일·가정양립 정책, 군인 정년연장, 군급식 개선 등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를 증진하는 부분부터 작전부대가 필요로 하는 전투장비와 신무기 도입 프로세스의 개선까지 인사·정보·작전·군수 전 분야에 걸친 정책지원이 필요합니다.

경제안보시대, 민생과 국방은 하나

신냉전을 비롯해 세계질서와 안보지형이 급변하면서 경제와 안보가 떼려야 뗄 수 없는 한몸이 된 지금의 ‘경제안보시대’를 감안하면, ‘잘사느냐, 못사느냐’ 하는 먹고 사는 문제(경제·사회)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죽고 사는 문제(국방·안보)는 별개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우리 국방위원회도 국한된 사고에서 벗어나 다각화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일례로 ‘저출산’ 문제만 보더라도 경제·사회·교육 뿐 아니라 국방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결합하여 병역자원 감소 현실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화된 과학화 장비를 운용한다 해도 ‘전투’ 현장에는



한기호 위원장
국방위원회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투분야 대체 민간인력으로서 민간군사지원기업을 권역별로 활용한다면, 장비 주거·복지시설·급식시설 완비 및 기술지원 등으로 훈련·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민간군사기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간군사기업 활성화와 관련한 제도적 고민이 이루어진다면, 민·관·군이 함께하는 안보공동체 형성 및 우리 국군의 군사력 증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산수출에 있어서도 우리의 미래 방산수출은 플랫폼 수출을 넘어 시스템 수출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술, 장비와 무기만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기의 운용교리도 패키지로 수출하여, 지금의 수출증가가 지속적 방산 성장의 레버리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반도체 육성,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위조·변조 부품에 대한 사용 차단책 강구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 및 우방국들과 다양한 정보협력과 군사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만큼, 우리 방산의 잠재적 협력국들과 군사정보 협력 및 국가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관련 공동 대응, 그리고 무기체계 공동개발 등 다양한 안보협력 의제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 처우 개선, 국방력 강화를 위한 총체적 접근 필요

2030세대인 간부들을 위한 출산·육아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각종 수당 및 여비 현실화 문제와 대상별 맞춤형 관리, ‘위라벨’ 보장을 위한 문화 확립 등을 포괄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간 초급 간부들의 당직근무비, 초과근무수당 등에 대한 목소리는 단순히 금액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30 청년세대인 초급 간부들은 우리 군의 특수성과 국가예산배정 등의 상황을 모르고 비현실적인 대우를 바라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여 군인의 길을 택한 청년장교·부사관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군인에게 애국심이나 사명감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가는 군인이 지키지만, 군인가족은 국가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국방정책이 이루어질 때, 군인들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이 사회에 융화될 수 있는 길도 넓어질 것이라 봅니다.

군인은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지자체의 주민이며 유권자이고, 국가를 위해 언제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인 동시에 제복 입은 시민입니다. 우리 국회가 군과 군인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국방위원회는 ‘국민’의 군을 위할 때만이 그 존재가치가 있습니다. 제21대 후반기 국방위원회가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 어우러져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 군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재난 대응체계 점검, 보상 현실화 등 국민과 함께하는 행안위 될 것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로 행정과 지방자치, 재난과 안전관리, 경찰·소방, 선거관리까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뼈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가적 기후재난에도 안전한 대한민국

무엇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여름 ‘극한호우’라는 표현까지 등장할만큼 전국이 유례없는 폭우를 경험했습니다. 50명에 이르는 사망·실종자 수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냈습니다. 저는 행안위원장으로서는 충북 괴산, 충남 청양·부여·공주 등 피해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하며 군부대를 포함한 정부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요청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는 애통함이 가득했습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입니다.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작년 경북 포항 지하차장 침수 사고를 겪고도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정부나 지자체의 행태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등 책임 있는 기관의 역할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후재난이 닥쳐오고 있지만, 각종 안전기준이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신 지표를 반영해 안전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미 선진국들의 재난 안전 시스템은 예방과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



김교홍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습니다. 현재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재난 피해 시 보상도 현실화 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복구비용 지원 기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민간 피해 복구 지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

공정·중립적인 선거 관리 및 지방분권 강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관리의 공정함과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헌법 기관입니다. 1960년 3·15부정선거와 그로 인해 촉발된 4·19혁명을 거치며 공정한 선거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1963년 선관위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쿠리투표’, ‘자녀채용 문제’ 등 선관위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관위의 잘못된 관행은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채용 문제’는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민주주의가 이룩해 온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가치가 훼손되어서는 안됩니다. 행안위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선관위가 헌법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전국 지방 곳곳에서 양질의 일자리 및 인프라 부족, 이에 따른 가파른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의 공간적 특성과 역사적 장점을 살리고, 지방의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제도적 토양과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더 많은 권한 이양과 함께 스스로의 자치력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면서 진정한 마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그 출발점일 것입니다. 주민 자치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저 역시를 보태겠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도 시급합니다. 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습니다. 이에 신입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무원 이탈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그 피해를 오롯이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신입 공무원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인건비 상승 등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행안위 간사로서 여야 간의 협상을 이끌어왔습니다. 경찰국 설치, 이태원 국정조사 등 쟁점이 많았음에도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상임위를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국회 상임위 17개 중 행안위가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남은 1년 행안위위원장으로 산적인 현안들을 중재하고 해결해나가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안위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경제·외교·안전 등 일상화된 위기 속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항상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행안위가 되도록 행안위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투자 확대와 제도적 기반 정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국민의 삶에 삶과 행복을 더합니다. 문화·예술 활동은 마음에 감동과 위로를 전해주며, 관광·체육 활동은 바쁜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휴식과 활기를 줍니다. 코로나19로 일상 속 문화·체육·관광 활동의 소중함을 온 국민이 느낀 만큼,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적 역량의 핵심은 창의력에 있고, 창의력은 문화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문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은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창업국가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 산업 불공정행위 막고 K-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

혁신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는 공정한 권리 보장에서 시작됩니다. 콘텐츠 등 관련 산업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창작자와 제작사가 상생하는 창작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안, 문화산업 공정유통법 등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콘텐츠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저작권 침해 피해도 커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챗GPT,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의 디지털 혁신 기술 발전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해조정·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K-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



홍익표 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만 한류가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문화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영상콘텐츠 산업을 위해 세제 혜택 확대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콘텐츠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이끈 대형 플랫폼들의 막대한 투자가 특정 장르로 편중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소외장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펀드 확충 및 민간투자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분야에 재능있는 인재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타 산업에 비해 짧은 근속연수, 임금 양극화, 인력 mismatch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 기반의 사업으로 고용 기간이 짧은 문화관광콘텐츠 일자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고용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기간 동호회를 통한 생활체육 활동이 크게 위축된 만큼 지역·직장 단위의 스포츠 클럽 문화를 되살리고,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가 생활체육 시설을 확대할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 못하므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한 스포츠 시설 확대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

러 엘리트 운동선수의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은퇴선수 지원 사업을 내실화하는 등 엘리트 체육인들을 위한 정책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기간 관광 산업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규제가 풀렸지만, 이 기회에 최근의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혼자 하는 여행의 수요가 증가하고 워케이션(Work + Vacation) 형식의 비대면 근무가 확대되는 만큼 지역만의 독특하고 친환경적인 콘텐츠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 유입 및 생활인구 증가는 지역 고용 및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지역관광콘텐츠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심각한 경제·사회적 양극화, 계층 갈등 등의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가 우리 사회의 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선진국들도 중산층의 개념에 문화와 관련된 지출 및 활동을 포함시키고 문화·예술·체육·관광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활동 확대와 서비스 접근 향상,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농어가 안전망 구축과 식량안보 강화로 미래를 준비할 것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되고 엔데믹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가축 질병 등 국내외 문제로 많은 농어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태풍과 수해는 전국 농산물과 시설을 훼손시켰고, 설상가상 폭염까지 겹치며 농산물 가격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이 흔들리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 농해수위가 국회 의정대상에서 우수위원회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더욱 소임에 정진하라는 의미로 새기고, 농어민과 국민의 더 큰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해수위는 농어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위원회입니다. 농림·축산·해양·유통·수산·먹거리 등 어느 것 하나 민생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남은 국회 후반기도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농어가의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농해수위가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식량안보 강화 전략 필요

국제 곡물과 국제원유의 가격, 환율, 금리 상승은 농가 경영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3% 떨어졌지만,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7%나 올랐습니다.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은 심화되고, 생산비는 증가한 것입니다. 2022년 농가별 연간



소병훈 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평균 농업소득도 1994년 1천33만 원보다 84만 원 하락한 949만 원이 되었습니다.

농가 경영의 부담은 농민들에게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농민이 최소한의 터전을 지키고 위협받지 않도록 농산물가격 보장, 공익형 직불제 확대, 농가소득보장보험 도입 추진 등 다양한 정책을 살피고 농가 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러-우 전쟁과 기후 재난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도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식량안보 지수는 113개국 중 39위이고, 곡물 자급률은 2020~22년 평균 3개년간 19.5%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난해 쌀 농가 순수익도 전년 대비 36.8% 급락했습니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사전에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지원해 적정 규모의 생산·가격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실효적인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쌀값 안정화와 대한민국의 식량 미래를 위한 현명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농해수위는 곧 '미래 위원회'라는 마음으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산업 피해에 대응할 것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개시됐습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선언한 후 약 2년여 만입니다.

지난해부터 위원회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국제사회 협력 요청,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 등 정부를 향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

으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사실상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원전사고 오염수 방류가 허용됐습니다.

지난 5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1만 8천 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기준치의 180배를 넘었고, 방사성 물질 중 하나인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도 걸러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산물 금지,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 및 이력 추적제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원전 오염수 방류로 발생할 수산업 및 어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수산물 소비의 위축은 어민들의 피해뿐 아니라, 해양관광 및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한다면 수산물 개방에 따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요구도 해결해나가야 할 국가적 난제입니다.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야기될 수산업의 피해와 실질적인 지원, 대응방안에 대해 활발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어가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정부가 수산업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외에도 농업재해보험 확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CPTPP 등 참여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 청년 농업인 육성, 여성 농업인 지원, 농촌인구 고령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피감기관을 소상히 감사하고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정쟁 없는 정책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

대한민국 산업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국회의 역할 다 할 것

OECD·세계은행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3만 2천142달러로 전년(2021년)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명목 GDP는 1조 6천733억 달러로, 전년보다 3계단 하락한 세계 13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러 경제지표가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위기로 지쳐있는 기업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에 더는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신청은 724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 이상 늘어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입니다.

더 늦기 전에 벼랑 끝에 몰린 기업들에 다시 일어날 힘을 드려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정치와 국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바이오 헬스,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위기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정 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방향 점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신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꼼꼼하고 충분한 지원, 탄소 중립과 에너지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혁신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이 확대되면서, 그동안 자유무



역의 가치를 추구해왔던 국제통상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며 촉발된 통상갈등,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무역·통상을 정치·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화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기업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국가의 보호주의적 입법·정책 동향을 조기에 입수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RE(Renewable Energy)100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거스를 수 없는 과제입니다. 유럽에서는 RE100을 기반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2026년부터 실제 과세를 할 예정이고, 유럽의 대형 회사들은 우리나라 공급업체에까지 RE100을 요구하며 미비 시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탄소 중립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재생에너지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파리협정 6조에 따른 온실가스 국외감축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온실가스 국외감축은 유치국에도 온실가스 배출감소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본과 기술을 확보할 기회이며, 투자국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사용할 실적을 확보할 좋은 기회입니다. 이를 위한 기반을 정비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적 목표에 더욱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외 불안요인을 이겨내고 우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 본연의 역할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특히 일선에서 땀 흘리는 산업역군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습니다.

최근 수차례 인상한 전기요금과 유례없는 폭염이 맞물려 폭염·수해·태풍의 3연타를 맞은 국민께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에너지 취약계층 모두에게 국가의 손길이 제대로 닿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각지대나 부족한 점이 없도록 에너지바우처 보급 등 관련 대책 마련에도 힘쓰겠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금의 위기가 더욱 엄혹하게 다가옵니다. 금리는 작년 말에 비하면 하락했으나 최근 3개월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19를 겪으며 쌓인 대출잔액은 코로나19 이전보다 52.5% 증가한 1천427조 원에 달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때를 놓친 지원은 의미가 없음을 명심하며,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4일부터 납품 대금 연동제가 시행됩니다. 이미 2천여 기업이 법 시행 이전부터 자발적으로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올해 들어 유난히 기승을 부렸던 폭염은 에너지요금 인상과 맞물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하고 정부가 에너지요금을 지원하게 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핏줄이자, 주체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활동적인 국회로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미래를 목표할 것

어느 때보다도 보건복지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한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임에도 국민의 행복지수는 매우 낮은 편으로, 의료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과 초고령화, 연금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생산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다루는 정책·예산·법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올해 보건복지위원회가 다룰 중대한 현안이 많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현재 의료 현장의 의사 부족 문제, 비대면 진료 등을 통해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변화를 마주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연금개혁과 유보통합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비해야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단연 의료 현장의 의사 부족 문제의 해결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체계의 변화를 꾀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의료 현장 전반을 점검해,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흐름에 맞춰 보건의료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시점입니다. 현재 의사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5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의료인력과 공공의료 인프라 부족의 심각성은 이제 필수·지역의료 현장까지 밀려들어, 소아과와 응급의료과 등 곳곳에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인 보완과 개선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다가오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의료 인력 자원을 확보하고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은 물론 필수·중증 의료분야에 대한 수가인상,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의료체계의 또다른 변화를 불러올 비대면 진료 역시 정기국회의 현안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제한적 범위로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시범사업으로 실시됩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거동불편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의 범위 결정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방안 등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시행이 우선되기보다는, 현장의 실정과 국민의 요구에 맞는 의료법을 마련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제도적·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복지 체계 조성해야

연금 개혁은 오랜 기간 복지 분야의 현안이었습니다. 연금개혁은 그 사안이 중대하고 광범위해 우리 정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미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맞게 합당한 결단을 내리고, 순간의 반복보다는 미래에 대비하는 복지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보다 나은 내일을

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칠 때입니다.

연금 개혁의 첫걸음은 투명하고 전문성을 갖춘 논의 기구가 출범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회 공적연금개혁특위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공사연금 전반의 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개혁의 방향성을 정립하고, 국민여론수렴을 기반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연금개혁과 더불어 여야를 막론하고 장래를 위한 복지 대책으로 꼽히는 유보통합 역시 주요한 현안입니다. 이는 영유아 교육의 입장에서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된 보육과 교육을 일원화하여 첫 출발부터 격차 없는 성장을 지원해나가고자 하는 목표 아래 수립된 정책 방향입니다.

통합 연령과 교사의 처우를 포함한 교육 현장의 실정 취합, 통합의 우선순위 등 결정할 사안이 많은 만큼, 질 높은 보육을 위해 관리부처 통합 추진이 결정된 지금 깊이 있는 논의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연계된 기관이 많은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때로는 갈등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만큼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의 생애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의, 최고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장으로로서의 소임을 다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

약자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 노동정책,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환경정책 펼 것

지금 민생은 어렵고,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겹겹히 받아들이며, 정치인 중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치란 ‘국민이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민생을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산업안전 문제 등 현안

먼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일련의 노동정책 분야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당장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란봉투법 처리 문제, 사적 조직인 노조의 회계처리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조치, 대화는 배제한 채 무리한 수사를 강행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반노조 정책,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에서 빠져버려 노사정 대화를 위한 채널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평택공장 사망사고 후 안전조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발생한 SPC 성남공장 사망사고, 계속 줄지 않고 있는 건설현장 재해,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혹한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작업중지권 확대 등 산업안전 문제도 현안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또 솜방망이 처벌로 당초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과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킬리규제로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과 관련해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근로시간 개편 추진과 맞물린 포괄임금제,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뒤흔드는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박정 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움직임,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제 문제, 외국인 가사노동자제도 등 입장이 갈리는 현안이 산적해 여야 간 팽팽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여야 모두 법률안을 발의해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유사하게 여야가 같은 취지의 법률안을 발의한 적이 있었지만 보수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폐기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그 진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야가 적극적으로 논의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 문제는 무엇보다 상생이 핵심이고, 이를 위해 이해당사자 간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금 경사노위 상황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 생각해, 여야 원내대표단과 양당 환노위 간사에 위원회 차원의 노사정 소위원회를 만들어 시급한 현안을 조율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소위원회가 설치된다면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현안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일방적 정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및 기후변화 대응도 논의

환경 관련 현안은 당장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을 묵인하는 듯한 정부의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앞서야 할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듭니다. 여기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환경 관련 규제를 정부가 '킬러규제'라는 이름으로 악마화시키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큼니다. 가슴기 살균제 사건, 불산 노출 사건 등 대형 화학 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화

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킬러규제'로 지목되었습니다. 실제 두 법 시행 이후 각종 화학 사고 발생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정부는 기업부담을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행위 자체가 오히려 '킬러정책'이라고 지적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역시 '킬러규제'로 지목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 역시 반발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산업계에 큰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의 산업 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낮추고, 국외 감축을 15%(400만 톤) 늘리는 등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030년까지 우리의 NDC 목표인 40% 감축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정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음 정부, 미래 세대로 떠넘긴 상황에 대해 철저하게 따져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한 감사원의 정치감사, 부실한 하천관리로 인한 사고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모든 정책추진 과정에서 환경부가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 검증이 필요합니다.

노동 정책을 조정해 약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환경 정책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토의 올바른 보존 등 지금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겠습니다. 🌻

국민 주거 안정, 안전한 교통서비스 확대에 힘쓸 것

제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고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21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지난 1년간 국토교통위원장으로 국민 주거 안정과 안전한 교통서비스 확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주거환경을 둘러싼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전세 사기 문제는 국민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무더워지는 여름, 길어진 장마, 늦여름 태풍과 집중 호우 등도 불안감을 더하게 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과 차분히 미래를 대비해야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장단기 입법 과제를 폭넓게 살피면서 국민 주거 안정과 국민 안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보완 입법 추진

올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전세 사기'였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국회는 지난 5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책으로 부족한 점은 있었으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마냥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입법 과정의 빈틈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회는 6개월마다 정부의 보고를 받고 보완 입법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보



김민기 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완 입법 논의를 시작해 갈 것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 신청자 가운데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선별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요건이 까다롭거나 피해자 선정 폭 자체가 좁아 신청자 가운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호하고 까다로운 피해자 인정요건은 대폭 완화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입주 전 피해자, 이중계약 피해자 등 특별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당초 논의되었던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 등 전세사기 피해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안전 위협하는 아파트 철근 빼먹기 철폐

철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철근 없는 아파트들이 확인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LH가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하면서 이른바 ‘아파트 철근 빼먹기’가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철근 빼먹기 아파트 사태는 건설 현장의 오래된 구조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발주처와 시공사, 설계사와 감리사가 얽히고 유착해 이권을 나눠 먹고,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후진국형 사고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전국 모든 아파트 공사장과 신축 건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부정과 비리가 발견되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

치를 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철근 빼먹기 아파트 사태의 원인을 또다시 남 탓, 전 정부 탓으로 몰고 가려는 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정쟁으로 연결해 가려는 시도는 단호히 차단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밝혀야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이 2023년 5월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뀐 노선의 종점에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었고, 대통령 처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왜 바뀌었는가 하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장관의 독단적인 백지화 선언은 국가재정법, 도로법, 광역교통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누가, 왜, 무슨 이유로 바꿨는지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안 질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반지하주택 수해 예방을 위해 지하 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 등 안전과 관련된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의 주거 안정, 안전하고 폭넓은 교통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는 여성가족위원회 될 것

현재 대한민국은 계층과 세대, 젠더갈등의 심각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독박육아, 일터에서의 성차별 등 구조적 성차별은 여전하고, 젠더갈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혐오는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통합을 위한 성평등인식 확산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약자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 될 것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 정책 뿐만 아니라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 다문화, 젠더폭력 피해자의 지원 정책을 도맡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루,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의 여성 가족 위원회의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올해 8월 공원에서 한 여성이 출근길에 살해당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역 스토킹 사건, 금천구 데이트폭력 사건, 이번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까지 여성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공간인 집, 공원, 학교, 직장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폭력 방지대책 마련과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어떠한 대책과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여성가족위원회는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여성대상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여성대상 범죄 근절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 신림동 살인사건은 대낮에 도심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



권인숙 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을 당한 사건입니다. 범죄는 은밀하게 벌어지는 것이라는 상식을 뛰어넘는 공개적인 테러형식의 ‘묻지마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 공격의 수단으로 유행같이 번질 가능성에 더욱 시민들이 공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성범죄 형태의 ‘묻지마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및 혐오를 척결하기 위한 근원적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혐오와 불평등, 사회불안과 고립, 온라인 병리문화도 마찬가지로 점검해야 합니다.

여성 차별·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성평등 가치 실현 필요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양육과 육아환경, 가족문화, 여성일자리 등 성평등과 관련된 변화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안이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 해결책 마련도 중요한 점검 사항입니다. 출생등록조차 하지 못한 아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점검하고 어떠한 형태의 가족과 조건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그 가족과 사회가 제대로 품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임신 중지를 선택하지 못할 때 파생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해야 합니다. 저출생 시대 낳은 아이들을 제대로 잘 키울 수 있도록 국가 지원체계를 촘촘히 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 임신 출산에 대한 보편적 상담지원과 여성

의 재생산권 보장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세계 청소년들이 한곳에 모였고 국민들이 힘을 합쳐 마무리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국제행사의 초기 부실운영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세금 1천 171억 원을 사용해놓고도 부실 운영과 파행으로 이어진 것에 대한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여성이 처한 구조적인 환경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여성 인재를 키우는 방안도 고민하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 여성들이 처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환경, 여성 관리자나 임원이 부족한 구조적 원인, 남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과 통합의 길을 제대로 열어가겠습니다. 저출생 고령사회 같은 미래를 결정짓는 문제 앞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하기 위해 성평등이 핵심고리임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위원회를 이끌어하겠습니다.

성평등 없이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여성가족위원회를 이끌어하겠습니다. 🌻

대구의 신성장 미래엔진, 대구 동구

류성걸 의원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동구갑)





대구 동구는 대구의 진산(鎭山)인 팔공산 아래 금호강이 유유히 가로지르는 곳이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대구 동구는 KTX 동대구역,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등 풍부한 교통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벤처산업 등 대구의 미래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등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대구 동구를 류성걸 의원과 함께 돌아보았다.

글로벌 콘텐츠 허브, 동대구벤처밸리

국회보 취재진이 류성걸 의원을 만나러 간 날은 8월의 넷째주 토요일이었다. 의원 사무실에는 ‘민원의 날-민간어린이집 원장 간담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자리에서 어린이집 원장들은 ‘유보통합’(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보육·교육 통합) 계획에 따른 우려사항들을 이야기했다. 류 의원은 원장들의 걱정과 제안에 “더 알아보고, 더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류성걸 의원은 제21대국회 입성 이후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마다 지역 사무실에서 ‘민원의 날’을 열고 있다.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사무실을 찾아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충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류 의원은 “오늘이 67번째 민원의 날이다. 아무리 바빠도 주민소통의 시간만큼은 꼭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류성걸 의원은 ‘동대구벤처밸리’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대구역 네거리에서 범

어네거리에 이르는 2km 구간에 자리한 이곳은 류 의원이 특별히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다. 동대구벤처밸리에는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대구스케일업허브(DASH),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대구DIP) 등 기업지원시설이 대거 입주해 있다. 류 의원과 함께 방문한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는 대구DIP에서 운영을 맡아 콘텐츠 스타트업의 발굴과 육성, 크리에이터 창작, 스타트업 성장 지원, 콘텐츠 리딩기업의 육성,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웹툰캠퍼스, 대구글로벌게임센터도 이곳에 있다.

류 의원은 “대구의 성장 동력인 이곳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허브”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제19대국회 때부터 국비예산 확보에 힘써왔습니다. 제21대국회에서는 지역특화 메타버스서비스 개발 사업 등 10여 개 사업에 1천억 원 이상의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대구가 요즘 웹툰 작가의 산실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곳에는 곧 대구글로벌웹툰센터도 조성됩니다. 동대구벤처밸리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류성길 의원이 동대구벤처밸리에 위치한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동춘유원지와 국립신암선열공원

금호강변에 자리한 동춘유원지는 예로부터 대구시민이 즐겨 찾는 곳이다. 봄에는 그네뛰기와 봄꽃 놀이, 여름에는 수영과 보트, 가을에는 강변 갈대밭 거닐기 등 사계절 즐길 것이 많다.

류 의원은 매주 일요일 새벽마다 이곳 동춘유원지를 찾아 산책을 하며 지역민과 스킨십을 하고 있다. “12년 동안 거의 거른 적이 없을 정도다”고 자랑한 류 의원은 “공원에 오시는 분들을 거의 알아볼 수 있다. 제가 못 알아보는 사람은 외지에서 오신 분”이라며 미소 지었다.

“이곳은 대구시민의 휴식처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는데 최근에는 예전만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해맞이다리는 동춘유원지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다리인데, 지난해 보행자 데크를 전면 교체하고 스카이워크(강화

유리) 등을 설치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거듭났습니다.”

한편 국립신암선열공원은 국내 최대의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역으로 조국의 독립과 국권회복을 위해 신명을 바치신 52분의 애국선열들이 잠들어 계시는 성스러운 곳이다. 지난 2018년 5월 1일자 국립묘지로 승격됐다. 공원 안에 위치한 단층사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함양하고 계승시키는 공간으로 애국지사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대구지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곳이다. 매년 삼일절과 현충일, 광복절, 순국선열의날(11.17) 등 참배 행사가 진행된다.

류 의원은 헌화와 참배를 마친 뒤 대구 동구 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공원의 전망대로 향했다. 전망대에서는 저 멀리 팔공산과 대구국제공항·군 공항, 금호강과 동춘유원지, 해맞이다리가 보였다.

류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대구 동구에 위치



국립신암선열공원 단층사 전경



류성걸 의원이 KTX 동대구역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다.

한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으로, 지난 4월 13일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국내 최초의 민간·군 통합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방식에 더해 정부예산지원으로 추진된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이전 대상 시설물에 대해 대체 시설물을 조성·기부하고, 기부한 자에게 이전 대상 시설물을 양여하는 사업 방식이다. 군 공항 이전 부지가 개발되면 이곳에 천지가 개벽하는 거대 신도시가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항 이전부지에 미래복합형 신도시 건설

마지막으로 대구의 관문인 KTX 동대구역을 찾은 류 의원은 “이곳 동대구역은 대구 교통의 중심지다. 고속철도 뿐만 아니라 대구 도시철도 1호선, 고속버스와 대구권 시외버스를 유기적으로 환승할 수 있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대표적인 경제·재정 전문가인 류성걸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지냈다. 그는 세제를 정상화하고 국민에게 실익이 되는 입법에 앞장서왔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 수출입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관세법’ 개정안,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은 “지역의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 공항 이전부지의 미래복합형 신도시 건설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대한민국의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

대구: 글 고영선 사진 김진원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가 되는 것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당진시)

오스트리아에서 사회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 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고려대 경제학과 연구교수,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어기구 의원의 인생 좌우명은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어기구 의원을 만나 그의 인생 좌우명과 의정활동 이야기를 들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하며 정치를 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정치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개인의 이익이 아닌 국가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국민이 주신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과 권력을 절대 사적으로 쓰지 않겠다고 매일 다짐하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기구 의원은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에서 학부부터 석·박사까지 마쳤다.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에서 1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정치인들을 직·간접으로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독일 통일을 완성한 헬무트 콜(Helmut Kohl) 수상이나 통일된 독일의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고 독일 경제를 세계 최강으로 이끈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수상, 저의 스승님이시자 빈 국립대 재정학 교수 출신이신 알렉산더 판데어벨렌(Alexander Van der Bellen) 현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보면서 ‘저런 훌륭한 정치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유학 생활을 마친 후 어기구 의원은 교수로 재직하며 강의를 하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등에 몸담으며 사회양극화, 저출생·고령화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어 의원은 그 중에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경험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노사정 사회주체들이 모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현안들을 모아놓고 해법을 찾아내던 경험은 어디에서도 쉽게 하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경제문제를 다루는 경제소위, 사회문제를 다루는 사회소위, 노사관계 문제를 다루는 노사관계소위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반적 사회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어 의원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노동조합은 강력한 싱크탱크를 갖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싱크탱크 역할을 할 연구원이 없거나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하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 등에 관해 연구를 했던 것도 매우 값진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그동안 축적해온 지식과 경험 등을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와 제안을 했던 어 의원은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고 음지의 풀 한 포기라도 양지 바른 곳에 옮겨 심으려면 결국 국회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치입문을 결심했다고 했다.

“어르신이 행복하고 청년이 꿈 펼칠 수 있는 나라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제20대 총선에서 여의도에 입성한 어 의원은 올해까

지 7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눈에 띄는 입법 성과를 이뤄냈다. 코로나19 이후에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리쇼어링 유턴법)과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세) 세율을 100%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그는 “우리나라도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제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도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22년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농림해양식품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어기구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 여름 수해로 인해 농민들이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어민들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큰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남은 21대국회 동안 농해수위 간사로서 이번 수해와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농어민 피해보상, 농·어민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과 농어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 마련, 그리고 농어업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처럼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 누구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꿈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조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글 김현아 사진 유윤기

지성호 의원이 김회재 의원을 칭찬합니다



지성호 의원



“칭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올곧고 따뜻한 분”

김회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여수읍)

9월호 ‘칭찬합시다’의 주인공은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여수읍)이다. 지난달 그를 추천한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강단 있게 의정활동을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니 ‘참으로 올곧은 분’이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특히 따뜻한 마음으로 지역민들을 대하는 모습은 여야를 떠나 칭찬 주인공으로 추천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소개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 의원님과는 국회 조찬기도회 회원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데 의정 활동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저의 의정 활동의 성과는 여수 시민들과 함께 이뤄냈다고 생각한다.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초심을 잃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구인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 순천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한 김회재 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순천지청 차장, 광주지검 검사장, 의정부지검 검사장을 지낸 후 여의도에 입성하기 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30여 년 가까이 검사로 활동하면서 ‘사랑’을 기반으로 약자를 대변하는 ‘따뜻한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법조인 생활을 이어가며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만으로는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정치에 있다고 생각했고, 정의와 사랑의 균형 있는 실현을 정치를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해 정치를 결심하게 됐죠.”

그는 제21대국회 입성 후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수서발 여수행 전라선 SRT 9월 1일 운행 시작, 여수-남해 해저터널 올해 11월 착공,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굵직한 여수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한 점을 꼽았다.

“국회 전반기 국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그동안 소외된 여수와 호남 지역민, 그리고 남해군민들의 오랜 염원을 이룰 수 있어 매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부터 여수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낙후된 여수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촉구해 왔습니다. 여수시민께 큰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김회재 의원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위 위원으로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낸 일도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꼽았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민간개발사

업자들의 과도한 이윤 창출을 억제하고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내용으로, 이 법안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며 민생개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관광도로 지정, 화태백야 연도교 조기완공, 금오대교 건설, 여수-순천 고속도로 신설 등 여수를 남해안남중권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고, 여수 대학병원과 순천 의과대학을 설립해 17개 권역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동부권의 낙후된 의료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여수시민들과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은 다음 칭찬주자로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대구광역시 수성구갑)을 추천했다.

“저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지만 주호영 의원님은 봉사 국회의원단체인 ‘정각회’ 회장으로 평소 불심이 깊으시기로 유명하시죠. 5선 중진의원이지만 합리적이고 사심 없이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 여수에 향일암이라고 하는 명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4대 관음성지 중 하나인데 최근 문화재청에서 여수 향일암이 있는 금오산 일대를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지요. 하지만 향일암 앞 거북머리에 군부대 시설이 있어서 향일암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군부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 의원님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계셨는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견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여야를 떠나 ‘진짜 국회의원’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글 윤성혜 사진 김진원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원칙주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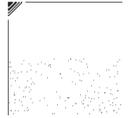
전주혜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법조인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제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당시 미래통합당)의 인재영입으로 국회에 등원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등을 지낸 그는 변호사 시절 성희롱 의혹 대학 교수의 해임 불복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원내대변인 등 당에서 직책을 많이 맡고 있어 ‘또주혜’, ‘분주혜’란 별명이 붙었다는 전 의원의 인생과 정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전주혜 의원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공직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그의 부친은 전남지사와 국가보훈처장, 제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전석홍 여의도연구원 상임고문이다. 전 의원은 “사익보다 공익을 더 우선시하는 아버지의 강직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공직자의 자세를 알게 모르게 배운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부친의 조언으로 사학과 대신 법학과 선택

학창 시절 역사 전집을 즐겨 읽는 등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학과에 지망하려고 했다가 아버지의 조언으로 법대로 진로를 바꿨다. ‘사학과에 가면 잘해야 사학과 교수가 되지만, 법대에 진학하면 좀 더 많은 기회가 있다’는 부친의 조언에 따라 그는 서울대 법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년 넘은 판사 생활을 끝낸 그는 재직 시절 원칙주의자, 합리적인 균형 감각을 갖춘 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판사를 오래 하다 보니 기억에 남는 일이 많아요. 아버지를 살해한 교수가 있었는데 피의자 신문 때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기도 했고, 뇌물을 받은 사람만 처벌 받다가 뇌물을 준 사람도 정식 기소한 사건도 기억에 남습니다.”

퇴직 이후 그는 대형로펌의 변호사로 활동했다. 판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에 대해 그는 ‘갑과 을의 관계’라며 미소 지었다.

“판사는 신분이 안정적이고 정년도 보장됩니다. 재판을 하거나 사건의 결론을 내리는 데 철저히 독립적입니다. 판사 시절에는 그 위치를 잘 못 느꼈는데, 변호사가 돼 법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니 판사가 새삼 대단하게 보이더라고요. 판사는 사실 특별한 의도 없이 질문을 던지거나 표정을 지을 때가 있는데, 변호사로서 판사의 질문과 표정 하나하나에 의미부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진실이 힘이 되는 사회 만들고 싶어

전 의원은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되자 정치인으로서 이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정치에 뛰어들게 됐다.

평소 여성 정책, 여성 관련 법률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자신의 중점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와 지원에 관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통과됐다. 그가 로펌에서 근무할 때 법률적 지원을 했던 ‘베드파더스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안 내는 부모에 대해 신상공개, 출국 금지, 형사 처분까지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 숨진 ‘정인이 사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살해죄’ 조항을 신설(‘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한 것도 전 의원이다. 그가 변호사 시절 간담회 등에서 아동·여성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것이 바탕이 됐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을 지낸 그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을 두 차례나 맡고 있다. 전 의원은 “제가 2021년 야당 대변인을 하다 올해 여당 대변인이 됐다. 여당 대변인이 돼보니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있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며 “대선 후보를 수행하는 일도 흔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활동들이 제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내년 제22대 총선에서 ‘여대야소’가 되는 것이 대선 승리의 마지막 단추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그는 국민의힘 서울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저출생 및 여성과 아동을 위한 법안을 좀 더 발의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전반기에는 열정과 패기로 범국가적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경험과 이해를 쌓아왔고, 후반기에는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을 이어가겠습니다. 힘이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닌, 진실이 힘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글 고영선 사진 유윤기

유령아동 방지와 보호정책,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등 주제로 토론회 열려

· 유령아동 방지와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는 7월 24일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유령아동 방지와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로 많은 아동이 유기되거나 사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령아동 방지와 보호정책 등 국회 차원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임상혁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장인 녹색병원 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다정 간호사,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이 사회적 페어런팅 방안 모색, 내년부터 시행될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과제,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생부에 대한 권리와 책임강화, 보호출산제 논의 등을 둘러싼 정책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 포럼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이 7월 25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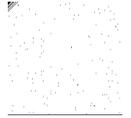
이번 포럼은 저출산시대에 저출생 및 인구절벽 대응의 올바른 방향을 논의하고 입법부에서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고강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아동수당 효과 분석’,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부모급여 도입과 현금지원체계 개편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이어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기획단장을 좌장으로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선숙 한국교통대 경영·통상·복지학부 교수, 강지영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현금 지원 제도에 대한 성과 논의와 제도 개선방안, 자녀 양육 비용 부담 등에 대해 토론했다.

·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이원택·소병훈·어기구·김승남·서삼석·신정훈·안호영·위성근·윤재갑·윤준병·주철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7월 27일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이 발제를 맡았고 토론자로 박혜민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사무관, 김동일 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개발팀장, 김병규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처 부장,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조원희 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 등이 참석해 농어업재해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해외 사례와 보험 외에 대안, 현 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의 필요성, 국가 차원의 농작물재해보상제도 도입 제



안 등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미래 청년예술세대 일자리 창출과 방안 모색' 포럼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은 7월 31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미래 청년예술세대 일자리 창출과 방안 모색'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현존하는 문화·예술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젊은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진단·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혜경 한국미래문화예술포럼 대표가 '문화예술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아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예술행정고시' 제도 마련, 전국 국공립 예술단체 확장 및 재신설, 모든 국공립 예술단체에 '국가공무원직렬제' 시행 등을 제안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김효근 이화여대 경영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신민준 예술네트워크활동가가 '문화예술 분야 인력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김종덕 국립무용단 단장이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성 제언'을 내놓았다. 또 박남희 홍익대 대학원 초빙교수가 '공공기관의 지원방식을 넘어 창작시스템의 제도적 개선을 위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민형배·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성희·이은주 의원(진보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8월 1일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이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입법 방향과 과제'를, 조창중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공무원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으며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국회의원들도 공무원의 노동권이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발표와 함께, 종합토론에서는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가 '법학계에서 본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정길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노동수석전문위원과 박정윤 진보당 정책실장이 '정당에서 본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 '고향사랑기부제: 재난, 재해 대응 관점에서' 토론회

박덕흠 의원(국민의힘)과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8일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재난, 재해 대응 관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가 모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재난·재해 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상기후로 인해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고향사랑기부금을 재난구호에 활용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신속하게 지원해 즉각적인 재해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토론회에서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를 통한 재난구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연경 페어트래블재팬 법인장은 고향납세가 재해 대응에 사용되는 일본 사례를 발표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의 다양한 활용법을 제안했다.

· '국립치의학연구원! 왜 덴탈시티 대구인가' 토론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8월 10일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국립치의학

연구원! 왜 덴탈시티 대구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에 의학과 한의학 등을 연구하는 전문기관이 있지만, 치의학 관련 국책연구기관은 없어 치과계에 서는 꾸준히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치의학연구원 설립 의견에 대부분 공감했다.

첫 주제발표는 강릉원주대치대 정세환 전 학장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개발혁신본부장이 ‘치의학 R&D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회 위원장이 ‘왜 덴탈시티 대구인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탁월한 접근성, 정부 정책기조, 대구의 치과 관련 산업·연구 인프라 등을 이유로 대구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 이지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치의학 분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며 치의학 산업의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치의학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김학용 의원(국민의힘)과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입법조사처는 8월 16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각 분야별 전문적인 인공지능 서비스가 발전하는 상황에서 국회 정책 개발 및 입법지원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최동녘 블록미디어 기자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입법지원’을, 정지은 코딩 대표가 ‘입법영

향분석에서 인공지능 활용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발표자들은 챗GPT를 국회 업무에 직접 활용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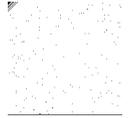
토론자들은 국회를 비롯한 공공분야의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해 윤리적 측면 고려사항,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기술 활용을 전제로 하는 신뢰 확보, 저작권과 정보보안 우려, 실제 의원실 활용과정에서 데이터 품질 논의 등을 논의했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토론회

장동혁 의원(국민의힘)과 국회미래연구원은 8월 17일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국 5개 시·도(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5개 시·도를 대표해 환영사를 한데 이어 김동일 보령시장이 화력발전소 시·군 행정협의회(보령·태안·동해·삼척·고성·하동·당진·웅진) 명의의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측에 전달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장, 문양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공론화,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 일부 지원 정책 재설계 등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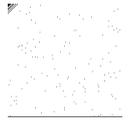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현황

(83건, 7.24~8.21)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7.24(월)	국가기관 공무원 저임금 실태와 차별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	강성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웹3.0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한국의희망, 블록체인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	양항자 의원실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유령아동 방지와 보호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긴급간담회	국회 빈곤아동정책자문위원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윤호중, 홍익표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국가 천연물 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 도출을 위한 정책토론회	권성동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국가엔지니어링 아젠다	김희국, 정일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7.25(화)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성과: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정책 방안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중전 70주년 고엽제 등급 문제: 고엽제 피해 보상과 후유(의)증 미망인 승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원식, 김병주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IAEA 최종보고서의 문제점과 국제협약을 통한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방안 토론회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강성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토론회: 소형 선박의 친환경 선박 전환 가능한가	위성근, 소병훈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한국사회의 인신매매 실태 진단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	강민정, 박법계, 윤미향, 장혜영 의원실	국가인권위원회 10층 인권교육센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	강득구, 강민정, 김두관, 김민석, 김용민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7.26(수)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서영석 의원실	장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전북특별자치도 국회 세미나	한병도, 정운천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통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강득구, 강민정, 도종환, 문정복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합한 콘텐츠 투자재원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변재일,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소방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조직법안 제정 전문가 토론회	김용판, 오영환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지속가능발전 국회 정책토론회	김종민, 윤창현, 양정숙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7.27(목)	대한민국 이민정책 이대로 좋은가?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김철민,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서동용, 안민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7.27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 정전 70년, 다시 평화	국회한반도평화포럼, 더불어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기후위기시대, 탄소중립 농업으로의 전환과 과제' 토론회	위성근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재해대책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이원택, 소병훈, 어기구,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위성근, 윤재갑, 윤준병, 주철현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제81차 정책세미나' 우창록(법무법인 울촌 명예회장) 리더십과 미래가치	이명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7.28(금)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경제 뇌관' 부동산 PF 경고 등 부실의 늪 해법은?	유의동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재생에너지 활성화 국회토론회	양이원영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7.31(월)	'정전협정 70년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DMZ-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한기호, 이양수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미래 청년예술세대 일자리 창출과 방안 모색	김승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8.1(화)	소방산업의 중요성과 진흥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토론회	임호선, 오영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강성희, 민형배, 용혜인, 이은주, 진성준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8.2(수)	전북특별법 제도개선 국회 세미나	정운천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8.2(수)	국가균형발전의 길: 지역청년 비전과 그 전략	강훈식, 김성주, 어기구, 임종성, 문진석, 박영순, 이정문, 홍성국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8.3(목)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아침세미나 하반기 경제전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병상자원의 적절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	이중성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8.7(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김상원, 김성환, 김주영, 김한정, 윤관석, 이동주, 이재정, 이철규, 홍정민 의원실	컨싱턴호텔 여의도
8.8(화)	실업급여가 시럽급여?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이은주 의원실	국회 본관 223호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아동친화적인 출생의료환경 구축 정책토론회: 건강한 생애 첫 출발 1000일	백종현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K-푸드 수출 One-Team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어기구, 이달곤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Web3.0 시대를 구현할 기술적·법적기반 구축방안	조정훈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	이형석, 임호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8.9(수)	고향사랑기부제: 재난, 재해 대응 관점에서	박덕홍, 한병도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KAL858기 진실규명 국제 토론회' 패배의식의 패배를 위하여: KAL858기 진실규명의 의미	설훈, 김홍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긴급 아파트 안전진단, 현장 노동자가 말하다	심상정 의원실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 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및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	최재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광복 78주년 기념 학술대회' 대한민국 국권 회복 과정과 한의사의 독립운동	홍익표, 이철규, 윤주경, 민형배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8.10(목)	국립치의학연구원 왜 탄탈시티 대구인가!!	조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 방안: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장혜영, 최혜영, 김예지 의원실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서비스 노동의 저평가 원인과 가치인정방안 모색 토론회	강성희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노동시장 이중구조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김주영, 박찬대, 이학영, 진선미, 천준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용혜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남인순, 강기윤, 고영인, 서영석, 최영희, 최혜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제78주년 광복절 기념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토론회 '제국(帝國)에서 민국(民國)으로'	윤주경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신동근, 김철민, 고영인, 강기윤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폭염기 건설현장 옥외작업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이은주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일시	세미나	주최	장소
8.11(금)	'간호대학생과 함께하는 국회 토론회' 청년 간호리더 정치를 말한다	최연숙, 이수진(비례)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시민단체 공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모색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8.14(월)	'김대중 납치사건 50주년 토론회'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과 시사점	더불어민주당 김대중대통령탄생100주년기념 사업준비위원회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
	해외 청년들에게는 술보다 흔한 마약 토론회	태영호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	이태규 의원실	국회박물관 대강당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	조명희, 김미애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8.16(수)	인공지능, 의회 정책 개발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김학용, 홍영표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김성주, 고용진, 김종민, 박성준, 양정숙, 윤영덕, 이용우, 황운하 의원실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코로나19 3년과 아동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 회복 국회 간담회	강민정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반복되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입법 토론회	노웅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검정고무신' 사례를 통해본 문화예술인 권리보호 법적 간담회	유정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을 위한 사회혁신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정책 국회토론회	윤주경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탄소없는 섬 제주를 위한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의 나아갈 방향 토론회	김한규, 송재호, 위성곤, 김성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안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OTT 환경에서 K-애니메이션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김승수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토론회	장동혁 의원실, 국회미래연구원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8.17(목)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전시회	이달교, 이인선 의원실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일차의료의 위기와 재정고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정식, 우원식, 정춘숙, 이용빈, 서영석, 이용우, 신현영 의원실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경기북부 발전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국회 토론회	박정, 윤후덕, 김성원, 김주영, 박상혁 의원실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정우택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8.18(금)	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제2차 TGN 국제전략포럼' 대만경제의 성과와 2024 총통선거 전망	태영호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정치양극화 시대의 지방정치와 선거제도' 공동학술회의	국회미래연구원	배재대학교
8.21(월)	문화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	임종성, 류호정, 이수진(비례)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미·중 전략기술경쟁 속 한·중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김한정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지역과 만나는 새로운 미래대학의 상상: 대학과 문화도시 콜로키움	김영배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과 과제	김성환, 최형두 의원실	국회도서관 강당
	'구하리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자격이 없다	서영교 의원실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은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까?	김주영, 이학영, 진선미, 이은주, 장혜영 의원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산·학·연 혁신·협력, 플랫폼 구축으로!	강준현, 강훈식, 김병욱, 김영배, 김형동, 송재호, 이인선, 전재수 의원실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의원 정책자료'(https://ampos.nanet.go.kr:7443/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경제권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역할 모색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항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 공항경제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광역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주제로, 공항경제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국제공항을 지역구로 둔 배준영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국민의힘,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울·가덕도 신공항), 이양수(국민의힘,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양양공항),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남동구갑·특별법 소관 상임위), 허종식(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갑·특별법 공동발의) 의원이 공동주최했고,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와 인천상공회의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배준영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공항의 수로 볼 때 ‘항공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일부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은 만년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제도권이 공항을 단순히 운송 거점으로만 보고 공항만 지으면 자연스레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공항과 배후지역의 인적·사회적·문화적 자원을 융합시켜야 공항의 잠재력을 온전히 끌어낼 수 있다”며 “이를 가능하도록 하는 플랫폼이 ‘공항경제권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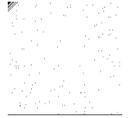
김도읍 의원은 “이미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공항을 중심으로 첨단·항공산업, 비즈니스, 물류, 관광, 문화 등을 융합한 ‘공항경제권’을 구축해나가고 있다”며 “공항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서라도 공항과 지역산업, 사회 등을 연계하는 공항경제권 구축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공항경제권 구축이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대부분 중앙정부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항이 위치한 지역의 문화적·산업적 특성을 반영해야만 공항경제권도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유창경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웅이 한서대 교수와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 센터장이 발제를 맡았고, 국토부·인천시·강원도·부산시 항공과를 비롯해 국토연구원, 한국항공대, 인천·공항 상생 발전을 위한 범시민협의회 등에서 다양한 패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웅이 교수는 ‘공항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항경제권의 필요성과 개념에 대해 설명한 뒤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역할 설정과 함께 공항경제권 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웅이 교수는 ‘공항경제권 구축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항경제권의 필요성과 개념에 대해 설명한 뒤 “공항경제권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역할 설정과 함께 공항경제권 사업이 정책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8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한 토론회'에서 배준영 의원(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김도읍 의원(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허중식 의원(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운영 참여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선 김지수 센터장은 “항공기 이동지역은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나 여객, 화물 청사, 공항접근도로 등 일반업무관리지역은 지방정부의 개입 가능성이 높으며 공항주변지역 개발 또한 지방정부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운영 참여를 위해 법령 제·개정을 통해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안광호 인천시 항공과장은 “지역과 연계해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항경제권을 만들어 나가야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공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균형발전과 공항의 효율적 운영, ESG 측면을 고려하는 측면에서도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과장은 “관광 수입이 큰 강원도 입장에서 지방공항 운영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지방공항이 자립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우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 발전, 도시 개발의 관점에서 공항경제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지방 공항은 공항 수요가 부족한 상황으로, 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공항 관련 산업, 시설물 배치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병중 항공대 교수는 “지방정부가 공항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기존 체제가 바뀌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 체제의 문제점과 새로운 체제의 장점을 명확히 판단해서 추진해야 하고, 주변지역 개발은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가 당연하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송원 인천·공항상생발전협의회 운영위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오래되지 않았을 때는 국가에서 전적으로 공항을 운영했지만 부산, 인천 항만공사 설립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를 논의할 시기이며 공항 발전은 지역의 산업 발전과 연계된 부분이 있으므로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하고 어떤 형태로든 지방 정부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글 김현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출생통보제 도입을 통한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보장 강화

출생통보제 도입 배경

최근 언론을 통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하고 임시 신생아번호는 부여받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천236명에 달하며, 이 중 23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미신고 아동이 복지에서 소외되고, 범죄의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알려져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현행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 의무자로 부모, 의사·조산사 및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국가·사회가 아이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된 출생신고를 보완하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출생사실 정보를 시·읍·면의 장에게 전달하는 출생통보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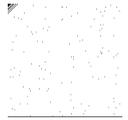
이에 출생통보제의 근거를 마련하는 10건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023년 6월 28일 법안심사제1소 위원회와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의결했고, 6월 30일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됐으며, 개정법률은 2024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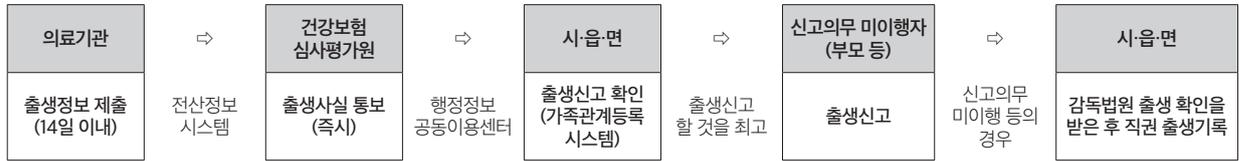
정성희 수석전문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출생통보제 내용

이번에 도입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이의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하고, 의



출생통보제 내용



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가 구축한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체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모(母)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모(母)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할 것을 최고(催告)하며, 최고기간 내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최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출생통보제의 의의 및 보호출산제 도입

아이가 태어나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출생신고가 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3월 23일(2021헌마975 결정)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국가 및 사회가 제공하는 보건복지·치안·교육서비스 등을 토대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출생통보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가 곧바로 시·읍·면의 장에게 전달되는 경우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산모는 의료기관 밖 출산을 선택하게 되어 산모와 아이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출산제의 동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9일 전체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법률안을 의결하면서, 미혼모, 입양아 등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된 보호출산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년 8월 25일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엔 의결된 법안에서는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산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산모 및 자녀의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엔 도입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등 관련 제도를 통해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하고, 태어난 아이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되어 기본적 인권을 누리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 관계 기관들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2023년 러시아 연방의회



손명동

국회 러시아 주재관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모스크바시티 등 모스크바 시내에서 드론이 격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방 언론은 우크라이나의 소위 대반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모적인 진지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연방 국가두마(하원)와 연방회의(상원)의 봄회기가 지난 7월 28일과 8월 6일 각각 종료되었다.

이하에서는 연방회의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2023년 봄회기의 주요활동과 특징, 가을회기와 9월 연방주체 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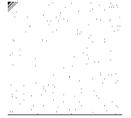
러시아 연방의회

러시아 연방의회는 ‘러시아연방 헌법’,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연방법’, ‘연방 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지위에 관한 연방법’, ‘상원 규정’, ‘하원 규정’에 따라 선출되고 구성해, 헌법에서 규정한 양원의 소관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하원 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상원 의원의 임기는 주지사 임기 및 지역 의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원 의원 225명은 지역구에서, 225명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상원 의원은 연방주체별로 입법기관 선출 1인, 행정수반 지명 1인이 각각 선출된다. 하원과는 달리 상원에는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는다.

상원과 하원은 의장 1인, 각각의 소관이 정해지는 부의장(상원: 제1부의장 2인 등 6인, 하원: 제1부의장 2인 등 11인)은 양원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위원회는 제7대와 달리 제8대의 경우 하원 32개,



상원은 10개로 구성·활동한다. 각 위원회에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¹⁾,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 위원수는 양원 규정에 따라 상원은 11~21명, 하원은 8~35명으로 구성된다.

연방의회의 회기는 하원의 경우 ‘하원 규정’에 따라 ‘규정 및 하원 활동 보장 특별위원회’가 결의안 형태로 제안하는데, 봄과 가을 회기로 나누어 정하고 전 회기 종료전 본회의에서 다음 회기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상원은 ‘상원 규정’에 봄·가을회기의 회기가 미리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회기의 변경은 가능하다.

러시아연방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통령, 상원, 연방 상·하원 의원, 연방주체 입법기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제안한 법률안의 심사는 개략적으로 하원의 경우 법안제출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사(3독회) → 상원 송부 등의 절차를 거치고, 상원은 하원에서 송부된 의안을 하원 통과 법안 접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사 → 대통령 서명·공포의 절차를 거친다. 양원의 의사결정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한다.

‘러시아연방 헌법’에 따라 하원과 상원의 의견이 달라 하원이 의결한 법률을 상원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정위원회에 관련 장관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수정의견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하원의 의결 후 상원이 의결하는 제도가 있다.

연방의회의 상·하원 의장은 헌법상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보회의의 상임안보위원(총리, 대통령행정실장 등

12명)이어서 대통령이 제안한 특별군사작전과 관련이 있는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의 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아울러 상·하원 의장이 봄회기를 종료한 후 각각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각 원의 활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2023년 봄회기 활동

하원은 지난해 가을회기에서 결정한 봄회기의 회기를 8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2017년(양원), 2018년(하원) 사례가 있기는 하나, 회기를 연장하고 본회의 개의 회수를 4회(통상 주 3회)로 정함으로써 하원은 최근 가장 긴 회기에 걸쳐 본회의를 56회 개의했다. 한편, 상원은 회기연장 없이 14회의 본회의를 개의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본회의를 개의, 연방법률 499개를 의결했다.

봄회기에서 특별군사작전 참여자 지원, 징집 연령, 외국인의 군복무 시 시민권의 원활한 취득 관련 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또한, ‘생산 및 소비 폐기물에 관한 연방법’ 개정과 관련하여 헌법상 제도인 상·하원의 이견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이번 봄회기에서 작동했다.

봄회기에서 의결된 특징적인 법률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의원의 사직 관련 법률이다. 상원의원에 대해 ‘상원 의원의 선출·지명권을 가진 연방주체의 기관이 해당 상원의원을 사직하게 하는 경우 상원의 결정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상원 의원이 소환(사직)될 수 있다’고 의결함에 따라 상원의원의 지명·선출권자의 권한은 강화된 반면 상원 의원의 신분보장에 영향이 있을 수

1) 제1부위원장은 부위원장과 달리 위원장 궐위(闕位)시 위원장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있다.

둘째, 특별군사작전 이후 병합된 지역의 통합과 관련된 법률이다. 2022년 10월 도네츠크 공화국, 루한스크 공화국, 헤르손 지역과 자포리자 지역의 ‘연방 가입 및 새로운 연방주체 형성에 관한 조약’을 연방의회가 승인하여 새로운 지역이 러시아 연방의 새로운 연방주체가 되었다.

이번 봄회기에서 이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연금 및 추가 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연방법¹⁾, 해당 지역 관련 ‘법원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연방의 ‘형법 및 형사 절차 적용’ 관련 법률 등을 의결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연금 적용, 부채상환 유예, 법원 설치 등을 통해 국가의 단일 법적 영역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계속된 것으로 상원은 평가하고 있다.

셋째, 특수군사작전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급여를 인상하고, 연방법률 ‘러시아연방군 등의 복무자와 그 가족의 연금’ 관련 법률을 의결하는 등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징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상향하고, 징집연령을 3년 연장(중전 18~27세)하는 법률을 의결했다.

또한, 군인으로 최소 1년간 근무를 마친 외국인에게 단순 절차를 거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외국인 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²⁾’이 의결됨에 따라 외국인의 특별군사작전 참여가 증가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넷째, 2월 대통령의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스타트 조약’ 중지 발표에 따라 연방의회는 상원 특별회

의에서 관련 조약 중지에 관한 법률을 승인하고, 5월에는 유럽 재래식 군사 협정의 파기를 승인한 것에 대해 상원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하고 있고, ‘제2차세계대전 종결의 날’(9월 3일)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와 제2차세계대전 종결의 날’로 변경한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의 지원 강화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론은 평가하고 있다.

가을회기 및 연방주체 선거

2023년 가을회기에는 특별군사작전 참가자와 그 가족의 추가 지원, 통일된 지역 통합과 관련된 문제 처리, 국가의 주권과 안보 강화, 기업 지원, 국내 산업 개발, 과학 및 기술 독립성 확보, 2024년을 포함한 다음 ‘3년간 연방 예산에 관한 연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우호국들과의 의회 외교를 통한 국제 협력의 발전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상원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9월 10일로 예정된 선거는 연방의회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선거는 하원의원 보궐선거(4개 선거구), 상원의원 지명 및 선출과 직결되는 연방주체의 행정수반(26개 지역, 지난해 말에 편입된 새로운 지역 포함), 입법기관 의원(20개 지역) 선출을 위한 것이다. 선거 결과는 직접적으로 연방의회 하원과 상원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당선인의 소속정당 및 득표율, 선거의 투표율 등이 특별군사작전의 향방과 더불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를 지켜볼 여지가 있다. 🗳️

2) 해당 법률에는 러시아에서 전문 분야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도 완화하고 있다.



‘꽃범의 꼬리’

여름의 끝자락에 와있는 9월, 긴 줄기를 따라 화사하게 핀 꽃이 눈에 띕니다. 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이 범의 꼬리처럼 길고 뾰족해서 붙여진 ‘꽃범의 꼬리’입니다.

층층이 피어나는 여러해살이인 꽃범의 꼬리의 꽃말은 청춘, 추억, 젊은 날이 회상이라고 합니다. 7-9월에 홍색, 보라색, 흰색 등 다양한 색으로 꽃이 피어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임진완

이달의 청원

현재까지 제21대국회에 접수된 청원은 총 146건으로 의원소개청원은 74건, 국민동의청원은 72건이었다. 이 중 지난 한 달 동안(7월 17일~8월 16일) 접수된 청원은 모두 7건(의원소개청원 2건, 국민동의청원 5건)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동의청원인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은 교사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봐 필요한 훈육조치 하기 어려운 교육현장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공방에 휘말리기 전에 진위를 확인·점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인 민원으로부터 교사의 권리가 보다 보호·확대될 수 있는 제도의 법제화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7월 22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하여 7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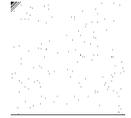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규정에서 “학교 외”를 삭제하는 한편,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사에게는 아무런 소명기회나 보호조치도 주어지지 않은 채 법적·행정적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부당한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7월 23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하여 다음 날인 7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학부모와 학생의 악성 민원 및 폭언·폭행에 맞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교사들이 정상적인 수업 및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권이 회복되고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생들의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7월 23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하여 다음 날인 7월 24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의원소개청원인 ‘부전-마산선 사고현장 복구와 중소기업 보호 위한 비용부담 문제 ‘중재’ 해결에 관한 청원’은 부전-마산선 복선전철 시공 중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정확한 사고 원인 발표 및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본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명확한 사고원인 및 대처계획의 발표와 중재제도 등을 통한 조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7월 24일 엄태영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인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군무원은 군에 임용된 국가직 공무원임에도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전투인력인 군인과 같은 신분으로 처우되고 있어 불합리하므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대상에 일반 군무원을 추가하고,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군형법’의 적용대상에서 군무원을 삭제하는 등의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7월 24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하여 다음 날인 7월 2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자료의 무단폐기, 업무추진비 정보 은폐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실시와 특별검사를 통한 수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7월 31일 국민 5만 명의 동의를 충족하여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마지막으로, 의원소개청원인 ‘산업재해 예방과 구직자 알권리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에 관한 청원’은 산재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인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인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직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게재할 의무를 두어 구직자가 구인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8월 11일 용혜인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어 같은 날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접수된 청원의 원문 및 위원회 심사정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청원현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

정리 국회민원지원센터

청원제목	청원자(소개 의원)	소관위	접수일	구분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부디 교사들을 지켜주세요에 관한 청원	이혜인	교육위	7. 22.	국민동의청원
학교폭력법 개정 및 악의적인 아동학대신고로부터 교사 보호에 관한 청원	이수민	교육위	7. 23.	국민동의청원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학생 폭언,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에 관한 청원	권아름	교육위	7. 23.	국민동의청원
부전-마산선 사고현장 복구와 중소기업 보호 위한 비용부담 문제 '중재 해결'에 관한 청원	김주일(염태영 의원)	국토교통위	7. 24.	의원소개청원
군무원의 국민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손**	국방위	7. 24.	국민동의청원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에 관한 청원	김예찬	법제사법위	7. 31.	국민동의청원
산업재해 예방과 구직자 알권리를 위한 직업안정법 개정에 관한 청원	김유승(용혜인 의원)	환경노동위	8. 11.	의원소개청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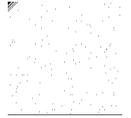
국회,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제빵 공장 사고 현장 시찰 등

연금개혁특위, '국민연금과 정부 재정 역할' 토론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연명·김용하)는 8월 9일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정부 재정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①국가의 국민연금 재정 책임 강화의 논리와 방안(발제 주은선 민간자문위원)과 ②국민연금의 보장성 및 보편성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개혁방안(발제 윤홍식 민간자문위원)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주은선 민간자문위원은 '국가의 국민연금 재정 책임 강화의 논리와 방안' 발제에서 독일·프랑스 등 해외 공적연금의 국가 재정 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사회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 원칙에 부합하는 연금재정 책임 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방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지출에 대한 일정 부분 국고 지원 방안 등을 검토했다. 이에 따른 세원 확보 방안과 국고지원 시점·비중 등의 논점도 함께 짚었다.

윤홍식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및 보편성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개혁방안' 발제에서 공적연금을 포함하는 사회정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 성장체제에 맞춰 크레딧 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핵심 노동자와 고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적·사적 연금시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부조적 성격의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제언했다. 크레딧 제도의 단기적 개혁 과제로 군복무·출산 등 사유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안,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확대해 실질적 주 돌봄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발제 후 민간자문위원들은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정부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과 크레딧 개편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2022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원장을 포함해 13인의 위원(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2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민간자문위원회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환경노동위, SPC 샤니공장 사망사고 현장 시찰

8월 1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숨진 50대 노동자 사건이 쟁점이 됐다.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1년도 안 돼 SPC 공장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을 질타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김형동 위원(국민의힘)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위해 위험방지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고가 난) 현장에는 경고음도 울리지 않고 경광등도 없었다.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위험성을 평가해 안전(위험)에 대해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지만, 이번에 위험성 평가에서는 아무 지적이 없었다. 노동부와 회사가 관리·감독을 잘못된 데 따른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환경노동위 여야 위원들은 8월 16일 경기 성남시 샤니 제빵공장 사망사고 현장을 찾아 샤니와 고용노동부 측으로부터 사고 경위 등을 보고받고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정 위원장과 함께 이수진(비례), 김영진, 윤건영, 이학영, 전용기, 진성준 위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임이자, 김형동, 지성호 위원(이상 국민의힘), 이은주 위원(정의당) 등이 참석했다. 현장 시찰 후 위원들은 수사당국과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의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장제원)는 8월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제는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이 후보자가 자녀 학교 폭력 사건 당시 학교에 외압을 행사했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자녀 학폭 사건은 학생 간 화해로 전학 조치됐고, 왜곡된 뉴스에 대해 언론과 이야기하는 것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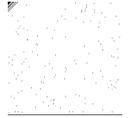
이 후보자는 이날 “문제 보도라는 이름으로 언론사 보도를 관리한 사실이 있는가”라는 이정문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우호적 보도가 나오도록 노력하는 건 홍보 라인에 있는 사람의 기본 직무”라고 답변했다.

또 공영방송의 공정성 논란에 관한 입장을 묻는 김영식 위원(국민의힘)의 질의에는 “시청자에 유익하고 공정한 내용을 전달해서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기본 자세”라며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방송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겠다는 것이 아니다.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방송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등 논의

8월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 전체회의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과정이 쟁점이 됐다.

여당 위원들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어긴 것은 ‘항명’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위원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수사 결과의 이첩을 다시 보류하라



고 지시한 데는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박형수 위원(국민의힘)은 “박 전 단장이 참석한 참모 회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사령관이 그 지시를 반복한 적이 없는데도 이첩을 했다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영배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1사단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자신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혐의자에서 사단장은 빠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 재정 확대 문제 논의

8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영석) 전체회의에서는 재정 확대 문제가 쟁점이 됐다. 야당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방만 재정을 방지할 수 없다고 맞섰다.

진선미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수출이 확대되거나, 세수가 확대되거나, 재정 투자가 많아져야 성장이 지속 가능한 시대가 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수출과 세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국 재정 투자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우리의 재정 상황이, 지금 경기가 다소 어렵더라도 0.1, 0.2% 성장률을 더 높이기 위해 재정을 다시 쉽게, 방만하게 빚을 일으켜가면서 대응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정태호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8월 초에는 대체적으로 기업 휴가가 많다. 8월 하순 수치까지 지켜봐야 한다. (8월에는) 일정 부분 소폭의 적자가 나더라도 9월부터는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수출도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정부가 신중한 재정 운용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김상훈 위원(국민의힘)은 “최근 국고 보조금의 부당 불법 유용 실태와 관련, 도가 지나친 민간단체들이 있다. 적어도 불법 시위를 주도한 단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NEWS

김진표 국회의장,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유치 축하 메시지 전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8월 6일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 확정 발표를 맞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김 의장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청년들이 함께 모여 신앙과 문화를 나누고 기후, 빈곤, 세계평화 등에 대한 청년들의 역할을 자리매김하는 가톨릭의 중요한 행사로, 이런 뜻깊은 행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한국 천주교는 물론 나라 전체의 경사”라고 기쁨을 나눴다.

김 의장은 이어 “전쟁, 빈곤, 기후위기, 질병 등 인류가 직면한 현안에 대한 전 세계 청년들의 진지한 논의는 우리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역사의 증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교황님께서 방북 의지 표명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는 만큼, 분단의 현장인 한국에서 교황님과 세계 청년들의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 한반도에 평화의 봄을 가져오는 위대한 여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지난 198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창시해 시작된 이래 2~3년마다 대륙별로 돌아가며 개최되는 축제로, 교황이 직접 참석하는 주요 행사다.

지난 2022년부터 한국천주교주교회의와 서울대학교구는 2027년 대회 유치 추진을 공식화하며 노력해왔고, 김 의장 역시 지난 3월

한국-교황청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면서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에게 유치 지원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왔다.

이러한 노력이 모인 결과,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 유치 확정을 직접 발표하는 결실을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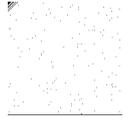
한편, 2023 리스본 대회는 150개 국 200만 명이 참석해 포르투갈에서는 5억 6천400만 유로(한화 약 8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최대 11억 유로(한화 약 1조 5천억 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예측되는 등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유치는 문화 교류 촉진과 국가 위상 증진 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사무처·국립외교원, 외교역량 강화 MOU 체결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8월 2일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국립외교원과 국회 외교역량 강화 및 외교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구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문가 참여·공동 워크숍 등 의회외교역량 제고를 위한 인적·물적 교류를 강화하고, 국가·지역별 현안 및 중장기 외교 전략 관련 종합적인 정보 공유와 연구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상호 강좌개설과 강사파견 등을 통해 국회 직원의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외교부 직원의 입법역량 제고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교육·연구 분야에서 국가·지역별 외교현안 정보교환, 전문가 자문 및 참여 등을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회외교활동과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광재 국회의사무총장은 “세계질서가 격동기에 들어선 지금, 국회와 국립외교원이 힘 모아 ‘지구 전체를 운동장으로 쓰는 전략을 짜야 한다’며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를 키워 의회외교가 공공외교의 핵심 축으로 거듭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사무처에서 이광재 국회의사무총장, 김상수 기획조정실장, 황승기 국제국장, 박혜진 의정연수원장이, 국립외교원에서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이문희 외교안보연구소장, 박지현 기획부장, 고재명 교수부장이 참석했다.

국회의정연수원,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 개최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전국 21개 대학의 대학(원)생 49명을 대상으로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를 실시했다.

국회 대학(원)생 아카데미는 대학(원)생들에게 의회민주주의 등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정치에 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2001년 신설돼 2022년까지 총 5천여 명이 참여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연수로 운영했고, 올해 4년 만에 대면 연수로 진행됐다.

이번 과정은 올해부터 기존 2일에서 5일로 교육기간을 연장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국회의 조직과 기능, 입법과정의 이해, 국가재정의 이해 및 예산안·결산 심사의 이해’ 등의

과목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제방법론, 법률안 입안과제 수행 및 법률안 발표’ 등 분임별 실습 과목을 통해 대학(원)생의 정책 아이디어를 법률안 형식으로 성안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국회도서관, ‘탄소중립’ 팩트북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8월 7일 ‘탄소중립’ 팩트북 2023-3호를 발간했다.

이번 팩트북에서는 탄소중립의 등장 배경,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탄소중립 현황과 정책, 국내 관련 법령, 국회 논의와 전문가

견해 등을 소개하고 있다.

폭염, 홍수, 가뭄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류와 생태계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한 ‘탄소중립’은 이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원칙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합의를 기반으로 중요한 국제규범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21년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쳐 왔다. 2023년 4월에는 ‘제1차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해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달성,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주요국들도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RE100 선언,

NEWS

ESG 투자 확산 등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과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프랑스 등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자력발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각국의 상황에 맞추어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 수준이지만 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협력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발간한 팩트북이 탄소중립 정책과 논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팩트북은 8월 7일 국회의원실, 상임위원회 및 유관 기관에 배포됐으며 원문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해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발간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정부가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 과정을 지원하고자 ‘2022 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를 발간했다.

이번 결산 분석 시리즈는 기존의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주요 사업 분석’이 추가되어 총 6개 분야 23권으로 구성됐다.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총량,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코로

나19 대응 소상공인·방역 지원 사업, 미래산업 전략 R&D 사업, 탄소중립경제사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해 심층적으로 점검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및 재무건전성, 개별 공공기관의 주요 사업 집행 결과 등을 분석했다. 또한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각 부처가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점검했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제도 운영과정 전반과 각 부처 성인지 대상사업을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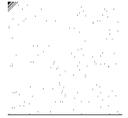
‘주요 사업 분석’에서는 저출산 등 인구위기 대응 관련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시리즈의 각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s://www.na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정책국감을 위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토론회 개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8월 16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발간을 알리고, 유용한 정책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소개함과 아울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이날 토론회는 본 보고서 발간 이후 첫 번째 토론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2023년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정책 현안으로 579건을 엄선하고, 과학적·정책적 분석과정을 거쳐 도출된 34건의 국정감사 중점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토론회 개최식에서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발간사에 이어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노고를 격려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격려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및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과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이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다룬 주요 이슈에 대하여 발제하고, 김준 전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천곤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연구본부장의 토론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복우 정치행정조사실장은 올해 보고서의 발간 경과를 설명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논의의 쟁점’ 등 정치행정 분야의 주요 이슈를 소개했으며,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재정준칙 등 국가 재정건전화 논의’ 등의 경제산업 분야 주요 이슈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향’ 등의 사회분야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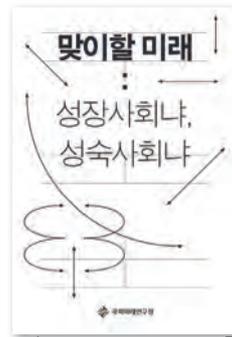
토론자들은 ‘국정감사 이슈 분석’이 현 국정감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의미 있는 정책자료라고 공감하고, 향후 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보고서가 되기 위해 주제선정 및 분석방향 정립의 필요성, 보고서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국정감사 수행에 필요한 조사·분석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의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

‘맞이할 미래: 성장사회나, 성숙사회나’ 단행본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7월 31일 단행본 ‘맞이할 미래: 성장사회나, 성숙사회나’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를 통해 관계, 환경, 교육, 경제, 정치, 국제관계 등 6개 분야에서 성숙사회로 가기 위해 던져야 할 미래 질문을 2개씩, 총 12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이 연구보고서를 올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설명으로 다시 정리한 단행본을 펴냈다.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보다 중요한 작업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지 논의하는 것”이라며 “미래전망의 의미는 현재를 바꾸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설립 초기부터 시민들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며 ‘선호하는 미래사회’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맞이할 미래: 성장사회나, 성숙사회나’라는 비전을 제시한 이 책은 그 노력의 결과다. 단행본은 전국 주요 공공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며, 전문은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

신속한 투자와 인재양성 등 첨단산업 육성을 이끄는 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22.8.4]

최근 미국과 중국 간 패권분쟁은 무역 분야를 넘어 첨단기술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첨단산업의 기술력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넘어 미래의 경제·안보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미 행정부는 중국의 첨단기술과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견제하고 있고, 중국은 반도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자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업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과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 2022년 1월 11일 본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의결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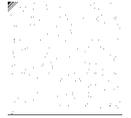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준승 입법조사관은 “우리 정부도 주요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없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실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안보

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정 의의를 설명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이라고 정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26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지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반도체 8개, 디스플레이 4개, 이차전지 3개, 바이오 2개 등 총 17개”라고 설명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관한 현황조사와 발전전망을 예측해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기본전략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연도별 실행전략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수립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은 법 시행 이후 수립된 첫 번째 기본계획으로, 첨단전략산업별 현황 분석 및 육성·보호를 위한 5개년 계획”이라고 밝혔다.

1차 기본계획은 550조 원 이상의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선도 사업 추진,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통한 신속한 투자 촉진, 규제 완화,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별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해 석·박사 우수 인력을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했다. 해당 대학에는 향후 5년간 총 450억 원이 지원되며 이 기간 1천500명 이상의 반도체 석·박사가 배출된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전략과 실행전략을 비롯해 정책추진과 제도수립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범정부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정립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과 관련된 규제 개선과 특화단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첨단산업 특화단지 7곳 지정… 2042년까지 민간투자 614조 원 추진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해당 특화단지의 육성시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화단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7차례에 걸친 평가위원회 논의 끝에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3개 분야, 7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고 지난 7월 반도체 2곳, 이차전지 4곳, 디스플레이 1곳 등 총 7곳의 국가첨단전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3'의 한 부스에서 소아 환자를 위한 통증 조절용 치료 로봇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다.

반도체 특화단지로는 용인·평택과 구미가 선정됐다. 용인과 평택을 묶어 세계 최대 반도체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고 구미를 반도체 공정 핵심 원재료 공급 기지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로는 천안·아산,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을 위한 특화단지로는 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군산(새만금), 울산 등이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 오는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의 민간 투자를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 처리 △킬러규제 완화 △세제 및 예산 지원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등이 지원되며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별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글 박민선



국회 본회의, 법률안 110건 의결

국회는 7월 27일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71건을 포함한 총 7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국가하천 배수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하천법’ 개정안,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전세버스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규제과학 진흥 및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국회는 이어 8월 24일 제40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9건을 포함한 총 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는 종합적인 도시하천 침수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 제정안, 오토바이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결과를 정부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하는 ‘중소기업인력법’ 개정안,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고독사예방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률안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하천법’은 국가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의 공사를 시행해 안전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개정됐다. 현행법상 국가하천은 환경부 장관이, 지방하천은 그 관

할 구역의 시·도지사가 관리한다. 하천 관리비용도 국가하천은 국고로, 지방하천은 해당 시·도가 부담하고 있다.

개정법은 환경부 장관이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시행하는 하천공사 비용은 국고로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시내버스 등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기존 버스를 대폐차(代廢車)할 때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은 노선버스뿐 아니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동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정법은 노선버스·전세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



고 있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은 제명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 혁신법’으로 전부개정됐다. 개정법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규제과학(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성능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는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 진흥과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규제과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품화 지원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등을 정하고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평가기준 등을 공개할 수 있고 평가기준 등이 혁신제품의 개발 계획 단계부터 적용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혁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자 또는 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에 대한 검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해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하는데, 이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처럼 긴급한 변

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안을 하려는 취지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금연구역을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국외에서 대형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재외국민에 대한 구급 활동, 재외국민 응급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송, 재난발생국 국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급 활동을 위해 국제구급대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국제구급대와 국제구조대를 통합해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해외출국자와 재외국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각종 사건·사고, 감염병, 테러 등으로 피해를 입거나 치료를 위해 국내로 긴급이송이 필요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은 도시하천유역의 종합적인 침수피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환경부 장관으로 하여금 10년 단위의 ‘특정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정도시하천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지만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예방이 곤란한 하천으로 정의했다.

환경부 장관은 도시침수 등 물재해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 환경부 장관은 도시침수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경감하기 위해 유역별로 도시침수예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륜자동차는 이동 편리성 등으로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불법 주행과 미흡한 차량 관리 등으로 인해 사고 건수·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륜자동차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사용검사(사용폐지 신고했던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정기검사(사용 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튜닝검사(개조한 경우 실시), 임시검사(소유자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 등을 받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과다 표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창출한 일자리의 ‘양’과 ‘질’을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지원 사업 선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수준’과 ‘근무환경’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정부지원사업 대상기업 선정 시 반영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에 위

치한 중소기업을 우대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법률안은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행정데이터를 연계해 고독사 예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개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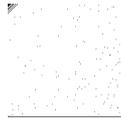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두고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그 밖에 위원장이 고독사 예방정책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협의하도록 했다. 고독사 예방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특례대상으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의결됐다.

개정안은 규제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이 면제되는 기준을 강화했다. 선불 충전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선불업자가 선불 충전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에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했다. 또 전자금융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고, 선불충전금을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재원으로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번 개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규제특례로 도입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제도화로 간편결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대한민국 대표 의정종합뉴스

빠르고 정확한 보도! 예리한 이슈분석과 치열한 토론!

국회라이프6

월~금 저녁 6시 / 생방송



앵커 강아랑
(前 KBS 기상캐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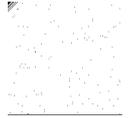
앵커 신동진
(前 MBC 아나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이 단축됩니다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행정안전위원회 2023-03-22 의결
본회의 2023-07-27 의결





최근 N번방 사건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한 경우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이 단축되었어.

기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사·의결

▼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45일 이내에 심사·의결

잘됐다~ 근데 삼촌, 이제 어엿한 직장도 생겼는데 연애는 안 해?

연애?
어디 좋은 사람이라도?



실은 삼촌 소개팅 좀 시켜주라고 엄마가 극성이셔. 올 학교 선배들 중에 괜찮은 언니 있는데 어때?



조카님... 용돈 줄까?



5년 후

아함~ 자기 나 배고파.

네, 마늘님. 잠깐만~

조카가 체대를 다닌다는 걸 그 땐 잊고 있었다. 그래도 행복해♡ 고맙다 조카야!



※ 법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구성 이진택

데이터로 묻고, 데이터로 답한다



빅데이터

모으면 모을수록 가치가 급상승하는 것 중에 데이터가 있다. 스스로 만들어낸 데이터가 아니라면 함부로 사용했다가 불법사용으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의 데이터는 개방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기업들이 회사 업무 중에 회사 비용으로 만든 데이터는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가능하다. 개방된 데이터나 합법적인 유통 경로를 거쳐서 획득된 데이터는 사용해도 무방하다. 물론 세상에는 이렇게 깨끗하고 투명한 데이터의 유통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뉴스를 보면 대량의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거나 또는 탈취한 데이터를 이용한 불법 금융거래 사고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된다.

반도체와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저장되지 않았던 정보들도 큰 비용 부담 없이 저장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이 연결되면서 데이터 광산을 형성해 가고 있다. 금광에서金を 캐듯이 데이터 광산에서는 정보를 캐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라고 하면 자료 갯 듯이 잘 정돈된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상용화된 현재에는 문장이나 이미지들도 그 자체로 데이터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확장된 데이터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도 과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었던 고급 정보들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의 모든 주택의 시세와 가격 추이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알아보는 데 몇 초도 걸리지 않는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24시간 열려 있



는 약국을 찾는 것도 수월하다.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격인 금융기관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거래했던 모든 금융기관의 현재 상황을 알 수도 있다. 심지어 휴면 예금을 발견하면 최고의 조건으로 재예치 하라는 권유를 던지기도 한다.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이러한 기술 발달에 따른 세상의 변화에 가속도를 붙였다. 기존 데이터에 새로운 데이터를 합해서 상대적으로 풍성한 데이터를 이용하면 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취지라고 보면 된다. 서울시는 심야 버스 노선을 결정하는 데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다. 심야에 핸드폰 사용량이 많이 있는 지역을 새로운 심야 버스가 필요한 곳으로 정한 것이다. 일기예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전 세계의 모든 일기예보를 비교해서 보기 시작했다. 혹자는 전쟁이 일어난 지역의 일기예보가 가장 정확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미국의 아마존이나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당일 배송이니 익일 배송이니 하는 마케팅 문구들은 지금까지 하던 것을 조금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미국이나 중국처럼 나라의 크기가 엄청난 경우라면 초현실적인 속도의 배송은 불가능에 가깝다. 지역마다 소비자 구매 데이터를 최대한 취합해서 품목과 수량을 예측하고 미리 최대한 가까운 창고에 가져다 놓아야 한다. 수만 가지의 물품을 이렇게 다룬다는 것은 데이터가 풍부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학적 모델이 놀랄 정도로 정교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일 누가 무엇을 얼마나 살지 그들은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이다.

빅데이터의 세상에서는 통계적인 의미에서의 관련성을 넘어서기도 한다. 세상에는 교과서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다. 여름에 폭염이 나타나면 시금치 값이 폭등한다는 뉴스가 나오곤 한다. 사회적 폭력성이 병원균으로 인한 감염병과 같은 양상으로 전파가 된다는 연구 결과도 보도되고 있다. 온도와 시금치 값을 표현하는 그래프가 유사하고, 폭력 사건이 모방범죄로 퍼지는 그래프가 전염병이 번지는 그래프와 유사하다면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참고할 만하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데이터 간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 개떡같이 물어도 찰떡같이 대답하려면 데이터를 잘 활용해야 한다. 🍌

글 김동철 송실대 IT정책경영학과 교수



“국회를 국민에게, 국민을 국회로”



김명진
국회방송(NATV) 국장

Q. 국회에서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어떤 계기로 국회에서 일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A. 지난해 10월부터 일했으니 벌써 열 달이 넘었습니다. 외국에서 장기 휴가 중이었는데 후배한테 방송국장 공모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방송 기자로 28년을 보낸 제게 국회방송국장 응모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가장 익숙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눈부신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밥값 이상은 해야 한다는 각오로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릅니다.

Q. 국회방송 소개 및 현재 담당하고 계신 일을 소개해주세요.

A. 국회방송의 존재 이유는 ‘국회를 국민에게, 국민을 국회로’라는 캐치프레이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송함으로써 국회와 국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일입니다.

현재 3개 과에서 PD, 취재 및 촬영 기자, 기술직, 행정직 등이 일하고 있고요. 다른 방송국과 차이라면 이들 모두 공무원(70명)이거나 공무직(60명)이라는 점일 겁니다. 정관용 교수, 신동진, 송경철 앵커를 포함해 유명 MC와 앵커, 아나운서, 작가 등 프리랜서 50여 분도 빼놓을 수 없는 국회방송 식구들입니다.

방송국장이 되고 나서 놀란 점 중 하나가 ‘싸우는 국회의원’보다 ‘똑똑한 국회의원’, ‘새벽부터 심야까지 일하는 국회의원’이 정말 많더라는 점이었습니다. 주변에 이런 얘기를 하면 “벌써 공무원 다 됐네”라고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방송국장의 소임은 국회나 국회의원의 참모습을 알리는 ‘최고의 방송국’, ‘대체 불가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Q. 국회방송이 유튜브를 통한 국정감사 생중계와 다양한 플랫폼 등 뉴미디어 분야에 앞장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회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A. 지난해 말부터 유튜브용으로 특화된 콘텐츠 4개 프로그램, 40여 편을 제작해 업로드했습니다. 국회방송으로선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방송용 콘텐츠도 SNS용으로 짧게 재가공하고, 쇼츠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희망적입니다. 지난해 10만 명 정도였던 유튜브 구독자 수가 12만 명을 돌파하고, 인스타그램도 1만 명이 넘었습니다. 조회수도 100% 성장했고요. 무엇보다 상당수 콘텐츠에 댓글이나 ‘좋아요’ 반응이 수백 개씩 달리면서 채널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국회의장님과 국회사무총장님의 관심과 지원 덕택에 가능한 일입니다.

올해 10월쯤엔 다소 모험적이지만 ‘당차당 국혜영(가제)’이라는 웹드라마와 매주 1시간씩 ‘떴다 여의도 일타강사(가제)’라는 생방송 프로도 선보입니다. 콘텐츠 전파력이 강한 젊은 층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 성향의 유명 유튜버나 아이돌을 출연시켜 볼 생각입니다.

최근에는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의 관계 정립이라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1만 8천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공식 유튜브 채널과의 기계적인 통합보다는 서로의 업무 분장과 콘텐츠 차별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정부 부처들 역시 방송과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국회방송 채널의 경우 이미 9천 개가 넘는 콘텐츠가 실려 있어서 오히려 채널 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일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보람된 일도 있을 것 같고요.

A. ‘어공’이라고 하죠. ‘어쩌다 공무원’이 되다 보니 처음엔 사소한 일조차 쉽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티셔츠, 캐주얼화에 익숙해 있다가 양복에 넥타이 매고 온종일 근엄한 분위기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 오더라고요. 코로나에 두 번이나 걸린 후 유증으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장만한 구두를 신고 넓디넓은 본관 회의장을 찾아 해매다가 발뒤꿈치가 성한 날이 없었고요.

지난해 말 법인세 등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통과가 뼈격거릴 때 현안과 동떨어진 방송 토론 주제를 선정했다가 의장님께 공개적으로 호된 질책을 받았던 일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부끄럽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게을러질 때마다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포부와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구성원들간의 인화가 중요한 목표이고요.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만큼 때론 갈등이 불거지기도 합니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신바람 나는 직장생활, 미래가 있는 방송국을 만들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를 매일 고민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많이 듣고 많이 떨 생각입니다.

국회방송이 내년 5월이면 개국 20년을 맞습니다. 4월 총선도 앞두고 있고요. 개국 당시와 비교하면 일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회방송에 대한 기대치는 지상파 수준에 가 있는데도 우리 역량은 이에 미치지 못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행정부가 운영하는 KTV(한국정책방송원)만 봐도 우리보다 공무원은 40여 명, 예산은 100억 원이나 많습니다. 예산과 인력은 최고의 방송국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일개 국장으로서 한계가 있겠지만 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글 윤성혜 사진 임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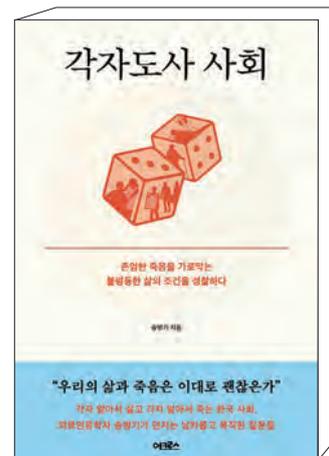
각자도사 사회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성찰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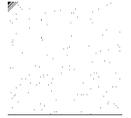
“집에서 죽으면 ‘좋은 죽음(혹은 자연사)’이고, 시설에서 죽으면 ‘나쁜 죽음(혹은 객사)’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존엄한 죽음은 집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적 세계에 올려 퍼지는 ‘집 안의 목소리들’에 달려 있다.” - 27쪽

의료인류학자인 송병기는 오랫동안 의료 현장에서 죽음을 둘러싼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왔다. 그의 관심은 그간 의학과 윤리학에서 담아내지 못한 죽음의 ‘현장’ 이야기를 인류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특별함이 있다. 인류학적 시선을 통해 하나의 가치와 기준을 고수하기 쉬운 의학과 윤리학이 놓칠 수 있는 죽음을 둘러싼 각자의 시선들이 엇갈리는 교차점을 잘 담아낸다.

책의 부제는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성찰하다’라고 붙여져 있다. 겉으로 보기에 한국 사회에서 죽음을 둘러싼 법 제도의 언어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불평등한 구절은 없어 보인다. 의료인 중 누구도 이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더 치료받기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으며, 국내법 조항에서 죽음을 재촉시키는 구절도 없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죽음이 ‘불평등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다면, 그것은 어떤 이들이 특별히 빈곤하게 죽어가는 데에 있지 않다. 그것은 ‘존엄한’ 죽음의 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는 수많은 삶의 조건들을 누락시키고 있는 데에서 온다. 책에서 적고 있듯 의료 현장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도 한국 사회에서 존엄한 죽음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



저 자 송병기
출판사 어크로스출판그룹
출판일 2023. 2.



는다. 질병과 노년은 곧잘 요양병원으로, 다시 요양원으로 치료와 수발을 위해 수없이 연쇄적으로 이동하고 옮겨진다. 요양보호라는 값싼 노동력을 통해 최소한의 생물학적 요구를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그 과정에서 죽음으로 가는 현장은 다만 시설 밖의 삶을 유예하는 현장이 된다. 죽어가는 사람의 의학적, 사회적, 실존적 요구를 살피는 것 역시 현장의 개개인이 알아서 감당해야 한다. 그 조건은 철저히 각 개인이 처해 있는 '자원'이라는 인적 물적 네트워크에 기대고 있기에 생물학적 죽음이 아닌 소위 '인간적인 죽음'은 더욱 불가능해진다.

저자는 '자기 결정권'과 '존엄사' 등의 윤리적 서사 속에서 도리어 묻히고 방기되는 죽음의 목소리와 시선을 살핀다. 다양한 당사자들을 만나며 '커뮤니티 케어'나 '환자를 보는 병원'이라는 표면 속에 감추어진 각자의 소외와 고립, 단절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확인한다. 많이들 얘기하는 '좋은 죽음'이란 단어 속에서 오히려 서로가 좋은 죽음을 이행할 것으로 믿지 않는 불신의 골과 불협화음이 드러난다. 의사는 환자들이 좋은 죽음을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믿지 않고 가족이 환자의 죽음의 여정을 방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환자와 가족들은 의사들이 좋은 죽음으로 안내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죽음이 최소한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한, 증상을 처리하고 통제하는 속에서 죽음은 이행된다.

흔히들 아플 때 덜 아프고 잠자듯 조용히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이라고 얘기한다(82쪽). 그 속에서 저자가 발견하는 것은 노화와 노쇠, 죽음에 대한 거대한 터부와 혐오다(86쪽).

병원은 죽음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오랫동안 한국에서 사람들은 죽음을 병원에서 맞이했다. 그러한 죽음은 다 괴롭고 아픈 기억이기만 할까. 고통화가 더욱 심해질 앞으로도 죽음이 시설 밖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요원하다. 시설 밖 죽음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것이 아니다. 이분법적으로 어떠한 삶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하다는 얘기만큼 어떠한 죽음이 부적합하고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속에 담긴 조건들을 놓칠 수 있다. 11장에서 저자는 코로나로 인한 죽음과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을 비교하면서 왜 어떤 죽음은 기억되고, 어떤 죽음은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다. 마찬가지로 좋은 죽음을 얘기하는 선에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죽음은 나쁜 죽음이 되고 기억되어서는 안 될 죽음으로 터부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죽음을 둘러싼 규범을 세심하게 질문하는 저자의 작업은 우리가 삶의 조건에 대해 살피도록 인도한다. 그것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질문을 통해 삶의 조건이 기억되고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

글 최은경(경북대 의과대학 교수)

주자학(朱子學)과 다산학(茶山學)의 차이를 분명하게 가르는

정약용의 '맹자요의(孟子要義)'

중국 송나라 때 주자(朱子, 朱熹:1130~1200)는 사서(四書:대학·중용·맹자·논어)를 '대학장구(大學章句)'·'중용장구(中庸章句)'·'맹자집주(孟子集註)'·'논어집주(論語集註)'로 구별하여 성리학적으로 해석해 이른바 '주자학'을 완성했다. 조선의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은 주자의 주자학을 재해석하여 옳은 해석은 그대로 따르지만, 공자나 맹자의 본뜻에 맞지 않는 해석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실학적으로 사서(四書)를 다시 해석해 다산학(茶山學)을 이룩했다. 그렇게 해석해야만 공자나 맹자의 본뜻에 부합된다고 여긴 사람이 다산이었다.

우리는 지난번에 이미 고전의 하나로 정약용의 '논어고금주'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다. '논어고금주' 역시 주자학과는 다른 해석으로 주자학과 다산학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경학 연구서였다. 마찬가지로 '맹자요의' 또한 주자학과 극명하게 구별되는 다산의 경학 연구

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전의 하나다. '맹자'는 본디 7편 14권의 책인데, 다산은 '맹자요의' 9권으로 편집하여 성리학적으로 해석된 주자의 '맹자집주'를 다산학의 관점으로 다시 해석했다. '맹자요의'는 다산의 강진유배 시절의 저술이다. 1813년 겨울 '논어고금주'를 완성하고 그 이듬해인 1814년 그의 나이 53세 되던 여름에 완성했던 책이다. 조선후기 조선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 정약용은 애초에 사서육경(四書六經)의 경학 연구에 노력을 집중하여 232권이 넘는 방대한 경학연구서를 저술하는데 '맹자요의'는 바로 그중 한 책으로, 예전의 조기(趙岐)의 고주(古註)와 주자의 신주(新註) 모두를 비판하고 고금의 해석을 참작해 자신의 학설로 이룩해낸 책이었다.

주자에 의하여 집대성된 성리학은 '성즉리(性卽理)'라는 세 글자에서 출발한다. 그러면서 성(性)은 본연지성(本然之性)과 기질지성(氣質之性)으로 나뉜다는 대



전제로 논리가 전개되고 있었다. 이런 성리학의 대전제를 완전히 거부하고 성(性)은 결코 이(理)가 아니고 ‘기호(嗜好)’라는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주장했다. “성(性)이 이(理)가 된다는 근거가 고경 어디에 있느냐(以性爲理 有古據乎)”라고 물으면서 성이 이일 근거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본연과 기질의 설은 육경에도 사서에도 보이지 않는다(本然氣質之說 不見六經 不見四書)”고 반박하면서 주자의 해석은 맹자의 본뜻과는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듯 ‘맹자요의’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성리학 체계의 경전 해석을 반대하고 백성 일용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경(經)을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저술된 고전이다.

다산은 ‘맹자집주’의 해석이 맹자의 본지(本旨)대로 해석되지 않았다고 여겨 “경전의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천하를 해롭게 함이 이와 같다(經義不明 其禍天下如是)”고 말하면서 잘못 해석한 경전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걱정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송(宋)의 학자들이 불경(佛經)의 ‘본연여래(本然如來)’에서 ‘본연지성’을 끌어내 경을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성리학의 중요 논점이자 맹자 사상의 큰 이론인 사단칠정(四端七情)에 대한 해석에서도 주자학의 이론을 본질적으로 비판해 자신의 학설을 세우고 있다. 사단(四端)의 단(端)이 ‘서(緒:실마리)’라는 주자와는 다르게 ‘시초(始初)’라는 새로운 해석을 내려 다산학의 입장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인(仁)의 단(端)이라고 할 때 실마리의 경우는 관념적이지만 ‘시초’라고 하면 시작되는 것으로 실천에 옮겨야만 인(仁)이라는 명칭이 성립된다면서 실천과 활동이 없는 관념과 사변적인 논리는 무용하다는 이론에 이르고 있다. 그래서 다산의 경학은 바로 다산 실학의 터전이 된

다고 말하고 있다.

다산 경학은 다산의 경제학과 함께 본말(本末)의 위치에 있으면서, 경제학을 위해서도 경학을 연구해야 하고 경학을 위해서도 경제학을 연구해야 하는 것이 다산학이다. 특히 ‘논어고금주’와 함께 ‘맹자요의’는 다산학의 핵심으로 두 고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다산학 공부는 제대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일찍이 율곡 이이도 ‘격몽요결’ 독서장에서 ‘논어’를 읽은 다음에는 바로 ‘맹자’를 읽어서 “의(義)와 이(利)를 분명하게 밝혀서 인욕(人欲)을 막고 천리(天理)를 보존하라(遏人慾存天理之說)”고 강조했다. 12세기를 살았던 주자 이론에 18~19세기의 실학이 새로운 이론을 제공하던 시절의 다산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비록 다산이 주자의 이론에 반대한 이론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자는 역시 동양 중세를 대표하는 학자였음을 인식해야 한다. 600여 년의 차이가 나는 시대적 한계 때문에 다산은 결코 주자의 이론에 전적으로 찬성할 수가 없었다. 조선이 망할 때까지도 모든 학자들은 대부분 주자학을 신봉하면서 이론(異論)을 절대 배격했지만, 시대를 제대로 읽었던 다산은 자기 시대의 학문 이론을 새롭게 주장하는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학자였음이 분명하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고전을 읽어도, 가장 선진적이고 실용성이 높은 고전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논어’를 읽어도 다산의 ‘논어고금주’를 읽어야 하고, ‘맹자’를 읽어도 다산의 ‘맹자요의’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행히 이지형 교수의 역주본 ‘다산맹자요의(茶山孟子要義)’가 오래전에 간행되어 있으니 모두 그 책을 읽어 맹자의 높은 동양 철학을 이해하기 바라마지 않는다. 🍵

글 박석무(다산학자, 우석대 석좌교수)

산으로 떠나는
치유여행

“찬란한 가을을 기다리는 호남의 금강산”

대둔산

정상에서 보는 산 아래 풍경



금수강산 수많은 산 가운데, 유독 ‘소금강(小金剛)’이란 별명을 가진 곳들이 꽤 된다. 풀어보면 ‘작은 금강산’이다. 아름답기로 삼천리 최고로 치는 금강산과 견줄 만큼 산세와 경치가 빼어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국 팔도에 그렇게 불리는 산들이 꼭 하나씩은 있다.

그중 ‘호남의 금강산’으로 불리는 대둔산이 대표 소금강이다. 충남 논산시와 전북 완주군 등에 걸쳐 넓게 자리하면서 금남정맥 줄기를 따라 김제 만경평야를 굽어보고 있는 품이 넓은 산으로, 무려 1천여 개의 암봉이 6km에 걸쳐 이어진 한국의 100대 명산이다.

대둔산은 사계절 모두 아름답다.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 여름에는 운무와 계곡,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정상인 마천대(878m)를 시작으로 사방으로 뻗은 여러 산줄기가 기암

괴석과 어우러져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며 사시사철 산객들을 불러 모은다. 우뚝 솟은 봉우리마다 독특한 모양을 하고 언제나 맑고 깊은 산수화를 보는 듯 신비롭고 웅장하다.

대둔산은 높으면서 제법 가파른 산임에도 계절에 상관없이 찾는 이들이 많다. 이유가 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있어 산 중턱까지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곧 대둔산의 명물 금강구름다리가 주변 산세와 어우러지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풍경은 대둔산을 찾은 외국인들의 눈에도 무척 아름답게 보였나 보다. 사진을 찍어 SNS로 열심히 퍼 나르는 바람에 해외에서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유명해졌다.

우뚝 솟은 바위 봉우리와 기암괴석, 선경이 따로 없네

대둔산의 원래 이름은 ‘인적이 드문 벽산 두메산골의 험준하고 큰 산봉우리’라는 뜻의 ‘한듬산’이다. 명당 자리를 가까운 계룡산에 빼앗겨 ‘한이 들었다’해서 ‘한듬산’이 됐다는 재미있는 해석도 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경계에 있는데 산세가 수려하다 보니 1977년 전라북도, 1980년 충청남도가 각각 도립공원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귀한 몸이다.

등산로 출발점은 전북 완주, 충남 논산과 금산 세 갈래로 갈라지지만, 모두 최고봉인 마천대에서 하나로 모인다. 가장 많이 찾는 등산로는 완주 쪽 대둔산 국민관광단지에서 금강구름다리와 삼선계단을 거쳐 정상인 마천대에 오르는 길이다. 왕복 8.2km, 4시간 최단 코스다.

이 코스에서는 케이블카로 구름다리 아래 산 중턱(610m)까지 단숨에 오를 수 있다. 실제로 대둔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이 케이블카와 구름다리다. 케이블카는 대둔산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오르는 방법이다. 사방이 유리로 된 케이블카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면 그 아름다운 풍경에 너도나도 감탄사를 연발한다. 총길이 927m, 5분여 만에 전망대에 내리면 금강구름다리가 기다린다. 이어진 삼선계단을 오르면 마천대가 있는 정상까지 약 40분이면 닿는다.

케이블카가 있어 비교적 편하게 정상에 접근할 수 있지만, 사실 걸어서 올라가는 대둔산은 험준한 지형으로 유명하다. 기암괴석을 감상하며 오르는 최단 코스는 금강문 → 금강구름다리 → 삼선바위 → 마천대 코스다. 케이블카로 왕복해도 괜찮고, 산행에 방점을 둔다면 도보로 올라도 좋다.

조금 힘들지만, 등산로를 택했다. 대둔산 국민관광단지 주차장에서 상가와 대둔산관광호텔을 지나면 케이블카 정류장이 나온다. 유혹을 뿌리치고 길을 이어간다. 케

이블카 정류장에서 왼쪽으로 3~4분 정도 아스팔트 길을 오르면 들머리인 ‘동학농민혁명 대둔산 항쟁전적비’를 만난다. 동학농민군 1천여 명이 대둔산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하여 3개월간 항쟁을 했다는 설명이 안내판에 적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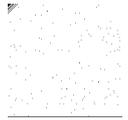
그림자 짙은 숲으로 들어가면 계곡을 따라 완만한 오름이 이어진다. 돌길과 계단을 20여 분 오르면 동심정 휴게소다. 이제부터는 급경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잠시 숨을 고른다. 바윗길을 한참 오르면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병풍처럼 둘러친 대둔산 바위 봉우리가 서서히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삼선바위, 장군바위, 동심바위 등 갖가지 형상을 자랑하는 바위의 자태에 눈호강이 따로 없다.



대둔산



대둔산의 명물, 금강구름다리



하늘과 맞닿은 마천대, 파도처럼 물결치는 능선들

가파른 바윗길을 오르다 보면 암봉계곡인 금강문이 나타나고 곧 전망대 갈림길이 나온다. 왼쪽 금강구름다리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곧 한순간에 탁 트인 시야를 통해 들어오는 기암절벽과 어우러진 절경이 나타난다. 인간계를 지나 선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로 신비롭다.

금강구름다리는 해발 670m에 놓여 있는 길이 50m의 철제 다리다. 다리 밑은 천 길 낭떠러지여서 걸음을 떼놓을 때마다 발바닥에서부터 짜릿짜릿한 느낌이 전해져온다. 아래를 내려다보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다. 하지만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풍광은 아찔할 정도로 아름답다. 구름다리를 건너면 작은 바위 전망대다. 뒤를 돌아보니 바위봉우리 사이에 걸쳐있는 구름다리는 한 폭의 산수화가 따로 없다.

대둔산 산행의 하이라이트는 뒤이어 이어지는 삼선계단에 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총길이 36m, 계단 127개, 경사 51도의 철재로 된 삼선계단 앞에 서서 위를 쳐다보면 급경사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조심조심 올라 서면서 눈에 잡히는 화려한 풍경이 위안이고 힘이 된다. 삼선계단 정상이다. 한껏 조여왔던 긴장을 풀고 바라보는 저 아래 풍경에 절로 탄성이 나온다. 봉긋 솟아오른 봉우리들과 구름다리가 절묘하게 어우러지고, 바위 위 소나무는 고고하다.

삼선계단 정상에서 급경사 오르막을 200m 정도 오르면 해발 840m의 정상 능선 삼거리다. 이곳에서 왼쪽으로 150m만 가면 대둔산 정상 마천대다.

하늘과 맞닿았다는 뜻의 마천대 정상에 올라서면 눈앞으로 섬처럼 솟은 크고 작은 산들의 능선이 물결치듯 일렁인다. 날씨가 좋으면 먼 북쪽으로는 계룡산과 대전 시가지가, 먼 남동쪽으로 진안군 마이산이, 먼 서쪽으로



대둔산의 기암괴석과 암봉

부안군 변산이 보인다. 장쾌한 풍경에 가슴이 뻥 뚫리고,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관통한다. 이 맛에 힘들어도 정상에 오르고 또 오른다.

하산길은 올라왔던 길을 되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워낙 가파른 내리막에 이번엔 케이블카를 이용한다. 케이블카에서 바라보는 창밖 풍경엔 다시 한번 감동의 해일이 밀려온다. 고단했던 하루의 선택이 최고였다고 위로 받는 것 같아 뿌듯했다.

대둔산에도 곧 가을이 찾아올 것이다. 지금 풍경들도 단풍으로 물들어 붉게 타오를 것이고, 구름다리 아래 기암과 협곡 사이로 흐르는 단풍 물결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가을엔 구름다리로 향하는 케이블카 티켓을 끊어보겠다며, 미소 짓는다. 🍁

글 | 사진 유인근(여행칼럼니스트)



대전, 전주, 논산, 금산에서 대둔산행 버스가 있다. 대전 서남부버스터미널에서 34번 버스를 타면 1시간. 배차 간격이 길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전주에서는 1시간, 금산에서는 30여 분 걸린다.



서울에서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대전통영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추부 나들목으로 빠져나와 17번 국도를 타고 왼쪽 대둔산 방향으로 가면 된다.



임채욱, '지리산 2301', 160×426cm(160×106, 4점), 한지에 피그먼트 프린트, 2023.

검고 푸른 저 산, 지리산

한지에 은은하게 배어있는 전경에는 바위산의 강렬한 검은 먹색과 아스라이 닿아있는 산맥의 푸른색이 드리워져 있다. 산의 흐름 사이사이에는 안개가 피어오르며 운무의 대장관을 연출하는 옅은 푸름이 피어난다. 이것은 필시 산하의 아름다움을 웅장하면서도 단정한 감각으로 처리해낸 한 폭의 수묵화다. 이룸하여 수묵산수미감의 절경이다. 그런데 아빨싸, 작품의 캡션을 들여다보니 한지에 피그먼트 프린트다. 그림이 아니라 사진이라는 얘기다. 임채욱 사진의 매력은 바로 이 지점, 그러



니까 ‘사진인데 그림 같다’는 느낌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작품은 지리산의 너른 품을 잘 보여준다. 장대하게 펼쳐진 화면 속의 산맥들은 벽소령 대피소 인근 언덕에서 남동쪽을 바라본 장면이다.

동쪽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운무가 피어나는 장면이다. 봉우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산의 흐름, 골짜기를 흐르는 안개의 희뿌연 흐름에 주목한 것이다. 임채욱이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지리산의 웅장함을 표현해내는 것이었다. 지리산은 1,915m라는 한반도

내륙 남단 최고봉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우뚝 솟아 존재감을 과시하는 산이 아니라 넓게 펼쳐 품어 안는 산이다. 그 품을 한지에 담아내는 과정에서 작가는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블루마운틴의 매력을 보여주는 장면을 연출했다. 아련하게 멀어져가는 산들의 겹침으로 푸른 빛의 장엄한 미감을 담은 것이다. 이렇듯 임채욱의 사진은 안료를 빨아들여 스미게 하는 한지 특유의 질감을 이용해 한국의 전통적인 미감을 잘 살려낸다.

임채욱은 10년 전, 지리산 노고단을 방문했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1박 2일 종주를 감행했다. 그 고생길은 임채욱이 산 작업을 지속하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주었다. 하지만 지리산은 북한산이나 설악산에 비해 작업으로 풀기가 쉽지 않았다. 기암절벽이나 계곡, 폭포 등의 드라마가 적기 때문이다.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른 뒤 2016년에 16인의 미술인들과 함께한 2박 3일 노고단-천왕봉 종주를 계기로 다시 지리산 작업을 시작해서 그 성과를 펼쳤다. 남원 실상사에서 열린 ‘지리산 가는 길’(2020)이 그것이다. 지리산을 담으려면 이웃 산을 올라야 한다. 덕유산에서 바라본 지리산 전경들을 비롯해서 지리산과 그 주변을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찍기 시작한 그는 북한산과 설악산에 이어 지리산 연작의 여정에서 이 작품을 제작했다.

공공 공간 위해 4m 넘는 대작 제작

산의 예술가 임채욱의 블루마운틴 시리즈 가운데 이렇게 4m가 넘는 대작은 흔치 않다. 국회와 같은 공공 공간을 위해 이렇게 대규모 작품을 제작한 것이다. 이 작품은 올해 2023년의 작품이다. 다시 말해서 이 작품의 피사체를 찍은 시점과 이 작품을 제작한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점에는 다큐멘터리 사진 및 디지털 기술과 프린트를 연결한 임채욱 사진제작술의 특이성이 들



국회의장 집무실에 설치된 '지리산 2301'

어있다. 그가 이 사진에 등장하는 대상물을 카메라에 담은 것은 2016년의 일이다. 지리산을 가로지르는 종주 코스에서 담아낸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제작술로 재구성한 것이 올해 2023년의 일이다.

임채옥은 사진을 찍는 것과 작품을 제작하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상호 연관된 과정으로 본다. 특히 작품 제작을 위한 확대와 축소, 대비와 변형 등의 편집 과정을 거치며 한지 프린트를 통해 차별화한 사진 작품을 제작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는 수묵화의 미학을 가진 사진가다. 임채옥 사진의 장대함은 대상을 포착하는 사진의 리얼리즘에 있다기보다 그것을 전통적인 감각의 산수풍경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한국의 전통적인 산수풍경은 산과 물과 바람 경치를 담는다. 풍경이라는 개념은 동북아 문화권 외에도 있는 개념이지만 대체로 산수를 붙여서 강조하지는 않는다. 풍경은 자연이나 도시의 모습을 말한다. 산수풍경은 산과 물과 바람을 포함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뜻한다.

설악산, 북한산 등 산의 예술가인 임채옥

산은 예술가들에게 깊은 영감의 원천이다. 임채옥은 산의 예술가다. 임채옥은 몸으로 산을 누비는 사람이다. 그는 사진을 위해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온 산천을 누비고 다닌다. 그가 다뤄온 주요 산들은 설악산과 북한산이다. 이 두 산의 상징성과 대표성은 온 국민이 공감하는 바다. 북한산 산장과의 인연이나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운동과 연대하면서 산 사람으로서 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산들, 특히 설악산과 인수봉, 인왕산, 지리산 등을 다룬 개인전을 20여 회 열었다. 한국의 산을 탐미하는 예술가 임채옥은 국내에서의 산 사랑에 머물지 않고 국제적 예술장에서 한국 산 사랑을 펼친다. 그는 유수의 해외 아트페어를 비롯한 전시장에서 블루마운틴이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펼쳤고 다수의 공공과 개인 컬렉션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회화의 전통적인 미감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하나로 임채옥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는 올해 9월 6일부터 전남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열리는 전남수묵비엔날레에 지리산 블루마운틴 작업을 출품한다. 수묵화를 주제로 한 국제미술행사에 임채옥을 범 수묵화 계열의 예술가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대학에서 (동양화라는 이름의) 전통회화를 전공한 그는 한국 고유의 미감을 체득하면서 예술가로 성장해 왔다. 그의 미감은 한국인의 정서, 특히 산을 찾아 자연의 품에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성찰하고 생명과 우주의 깊은 세계를 성찰하는 한국의 정신문화와 잘 맞는다. 임채옥의 블루마운틴을 통해 다시 생각해 보건대, 한국인에게 산은 자연과 인간을 연결해 생명과 우주의 정신성을 매개하는 지름길임에 틀림없다. 🍵

글 김준기(광주시립미술관장)

폭염에도 동심은 어쩔 수 없나봅니다



폭염경보가 발효된 8월 초 국회를 찾았습니다. 온 사방이 펄펄 끓듯이 뜨거웠지만 아이들은 잔디밭 호스에서 물이 쏟아지길 기다리며 마냥 즐겁게 뛰어놀았습니다. 물장난에 신난 아이들을 보면서 저도 잠시 더위를 잊었습니다.

차두연(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섬세한 어감이 우리말 품격을 높인다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 우리 국어 문법보다 영어 문법을 먼저 배운다. 더 큰 문제는 영어 문법조차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체계가 없는 공부로 배운 영어식 표현을 우리말에 적용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적 없는 말을 구사하게 된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어가 형성하는 주체성 혹은 정체성은 매우 강고한 것이어서 국가가 자신의 언어를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국가 형성의 핵심에 언어가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가 횡행하다 보니 우리말 표현에 문제가 생기는 현실을 자주 접할 수밖에 없지만, 그 중에서도 단어에 따른 어감을 제대로 모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감을 만드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말 어감을 충실하게 기르는 방법으로 추천할 만한 것은 좋은 문학작품을 많이 읽는 것이다. 작가는 우리말 표현을 섬세하게 가다듬는 전문가다. 물론 모든 작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좋은 문학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을 읽어보면 우리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느끼게 된다. 그런 작품을 읽다 보면 어느새 어감의 섬세한 차이를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음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가-1) 이 책은 얼마나 하나요?

(가-2) 만 원이나 한대구요?

(나-1) 이 책은 얼마인가요?

(나-2) 만 원이라구요?

어느 표현을 써도 책 가격을 물어본다는 의미, 책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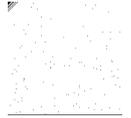
이 만 원이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에 차이는 없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표현을 적절하게 구분하면서 사용한다.

‘-(이)나 하다’라는 ‘-하다’라는 동사 앞에 ‘-(이)나’라는 보조사가 붙은 형태다. 대체로 값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체언 뒤에 쓰여서 대체로 값이나 정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점에 놀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가-2>의 경우가 바로 그 예다. <나-2>는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 확인하기 위해 발언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값이 높거나 낮을 때 그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렇지만 <가-2>는 값이 높다는 점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두 문장 사이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

<가-1>과 <나-1>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1>은 책값을 직설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물어보는 일반적 표현이라면, <가-1>에서 사용한 ‘-나 하다’는 책값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 상대방이 혹시라도 느낄지도 모르는 당돌함이나 불편함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섬세하게 보조사와 동사로 결합된 단어의 뜻을 구분해서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언어생활 속에서는 어감의 영역과 상당 부분 겹친다.

어감은 자신의 말속의 감정과 생각을 더욱 명확하게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외국어를 배울 때 익히기 가장 어려운 것이 어감인데, 완전히 그 사회의 삶과 언어가 녹아들어야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좋은 문학작품 읽기를 통해서 우리의 어감을 섬세하게 가다듬는 노력이 필요하다. 🍵

글 김풍기(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



국회 ART GALLERY 9월 작품전 국회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



바람

2023. 9. 1. - 9. 13.

작가 : 최현숙 | 추천 : 김철민 의원실



모든 이보다 낮은

2023. 9. 14. - 9. 26.

작가 : 김이경 | 추천 : 안규백 의원실

국회, 임시국회 개회·을지연습 실시 등

8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힘, '철근 누락 아파트'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목하면서 청와대 정책 결정자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혀
8월 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노인 비하' 논란 발언 공식 사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와 혁신위원회 해체를 요구
8월 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진표 국회의장, 한국이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로 확정된 데 대해 "한국 천주교는 물론 나라의 경사"라고 축하 메시지 전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회에서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는 더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혀
8월 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와 여당,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문지마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중신형)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에 대해 다른 야당과 연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8월 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영주 국회부의장, SPC 제빵공장 노동자 끼임 사고가 거듭 발생한 것과 관련해 "산재 사고를 반복하는 SPC그룹에 엄중한 근로감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혀
8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논의
8월 13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 공동조직위원장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스카우트잰버리 대회 파행을 사과하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
8월 16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월 임시국회 개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사니 성남공장에 방문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중대재해 발생 현장 확인 및 재해 발생 이후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적정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현장시찰 실시
8월 1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진표 국회의장,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14주기 추도식 연설에서 "통합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8월 2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야, 국정감사 10월 10일부터 열기로 합의 2023년 을지연습 실시
8월 2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소속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의 제명안 표결을 앞두고 내년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고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 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 지명
8월 24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 정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작 국회, 본회의를 열고 도시 침수방지대책 기본계획 수립 등 41건 안건 의결
8월 2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잰버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가 예정됐던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여당 의원들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불참으로 파행

정리 윤성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국민의 삶을 바꾸는 개헌!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일시	지역	장소
9/04(월) 14시	수도권-수원	경기도청 대강당
9/14(목) 14시	강원권-춘천	강원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
9/15(금) 14시	충청권-세종	세종특별자치시청 대회의실
9/22(금) 14시	경북권-대구	경북대학교 경하홀
9/25(월) 14시	경남권-부산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
9/26(화) 14시	호남·제주권-광주	5·18 기념문화센터 대동홀

주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한국정치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발 간 등 록 번 호

31-9710176-000680-06

국회사무처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